

공직적격성평가 (PSAT) 준비 안내

2005. 6.



중앙인사위원회
CIVIL SERVICE COMMISSION

목 차

I. PSAT 개요

1. PSAT의 도입배경 및 정의	1
2. 평가영역	1
3. 연도별 고등고시 1차 시험 시행계획	1
4. 문항 수, 시간, 배점	2
5. 문제출제의 방향	2
6. 수험준비의 기본 방향	2

II. 영역별 수험준비 안내

1. 언어논리 영역	3
(1) 영역의 정의	3
(2) 문항 구성의 소재	3
(3)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4
(4) 학습방법	4
2. 자료해석 영역	6
(1) 영역의 정의	6
(2) 문항 구성의 소재	6
(3)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7
(4) 학습방법	8
(5) 참고사항	9
3. 상황판단영역	10
(1) 영역의 정의	10
(2) 문항 구성의 소재	10
(3)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11
(4) 학습방법	11

III. 영역별 예제문제 및 해설

1. 언어논리	13
2. 자료해석	26
3. 상황판단	57

I. PSAT 개요

1. PSAT의 도입배경 및 정의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직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공직에서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선발방식인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가 도입되었다.
- PSAT는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의 성취도 검사를 지양하고 신입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2. 평가영역

- 언어논리영역 :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능력 등을 측정
- 자료해석영역 : 통계처리 및 해석능력, 수치자료의 정리 및 분석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측정
- 상황판단영역 :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측정

3. 연도별 PSAT 시험 시행계획

연도	시험명	시험과목
2005년	지역인재추천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2006년	행정(행정·공안직)·외무 고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행정(기술직) 고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물리학·화학·생물학개론 중 직렬별 1과목
	지역인재추천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2007년	행정·외무 고시·지역인재추천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 영어 과목은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단, 1차 시험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4. 문항 수, 시간, 배점

영역	문항 수	시간	배 점
언어논리	40 문항	80 분	100 점
자료해석	40 문항	80 분	100 점
상황판단	40 문항	80 분	100 점

5. 문제출제의 방향

-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의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신입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및 자질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는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6. 수험준비의 기본 방향

- PSAT는 기존의 과목별 평가와는 달리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암기와 지식습득 위주의 단기기간의 수험준비 훈련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 따라서 평상시에 폭넓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비판하고,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나 관련 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이슈·사건의 원인·성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험준비를 해야 한다.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은 여기에 제시한 문항구성의 소재와 평가항목을 기초로 하되 다양하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험준비 안내서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첨부된 예제문제와 풀이를 통하여 PSAT의 수험준비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영역별 수험준비 안내

1. 언어논리 영역

(1) 영역의 정의

- 언어논리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 능력 등을 검정한다.
- 언어논리영역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어휘력을 평가하거나 문법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

(2) 문항 구성의 소재

- 특정 학문의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지문의 소재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골고루 사용한다.
- 공직자에게 권할 만한 좋은 책이나 다양한 분야의 교양 도서뿐만 아니라, 서신, 광고·홍보, 지시·설명, 연설·비공식 대화, 토론 등 실용적인 목적의 글도 지문으로 이용한다.
- 대학교양수준의 지문을 사용한다. 단,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수험생이 개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다음은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출제될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

평가항목	측 정 내 용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글 속에 제시된 저자의 핵심 주장이나 논지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의 재료를 수집, 선정하여 개요를 구성하고 문단을 조직화하며, 고쳐쓰기를 통해 글을 완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추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글 속에 담겨진 경향·추세 등을 파악한 후 예상되는 결론(원인, 결과)을 찾거나 드러나 있지 않은 전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논리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글에 들어 있는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논증의 설득력을 타당성이나 일관성, 적절성 등의 기준에 의해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4) 학습방법

- PSAT는 종래의 과목별 평가와 달리 특정 시험과목이나 해당 학문분야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시험처럼 효과적 수험방법을 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래의 항목별 기본 학습방법을 참작하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항목에서는 수험생들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수험생들은 평소에 풍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는 것이 좋다.
 - 대학 기본 교양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도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 ‘표현력’ 항목에서는 글을 쓰는 기본 능력을 지녔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공직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는 보고서 작성일 것이다.
 -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훈련을 쌓는 것이 좋으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간단히 요약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 글을 새로이 고쳐 쓰는 훈련을 해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추론능력’ 항목에서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 논리적으로 서술된 다양한 글(논문, 고전 및 양서,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일반 교양서적 등)을 접해서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글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바를 추정해 보거나 그 글에서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등을 추정해 보는 훈련을 쌓는 것이 추론능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교양수준의 논리학 교재를 일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러나 “사람에 호소하는 오류”, “삼단논법” 등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 논리적 사고력 항목에서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글에 나오는 논증을 적절히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 일상적으로 접하는 글을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글을 이루는 각 부분의 내용상 연관관계와 논리적 연관관계를 따져보고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2. 자료해석 영역

(1) 영역의 정의

- 자료해석영역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정리하고 이 결과로부터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자료해석 능력은 일반적 학습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수치, 도표, 또는 그림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초통계능력, 수 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등이 포함되며 수치자료의 정리 및 분석 등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 수치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능력과 더불어 일반 적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영역으로 대부분의 학업적성검사와 직무적성검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PSAT의 한 영역으로서 자료해석영역에서는 일반 적성검사보다는 좀더 복잡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2) 문항 구성의 소재

- 자료해석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의 소재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이 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경제, 경영, 심리, 교육학과 같은 사회과학으로부터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시사적 자료까지 다양한 소재가 사용 될 수 있다.
- 자료해석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표(GDP, 기업재고, 실업급여 청구율, 시청률) 또는 지수(주가지수, 지능지수, 소비자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며 통계치(빈도, 백분율, 상관계수)를 이용한 문제 역시 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수나 지표 혹은 통계치 그 자체의 개념이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 정부(외국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통계표 및 도표
 -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통계표 및 도표
 - 비정부기구(NGO)에서 발표되는 통계표 및 도표
 -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조사 결과 및 도표
 - 다양한 분야의 논문에서 발표되는 자료 및 도표
 - 출제자가 문제를 위하여 구성한 가상적 자료
- ※ 이상의 자료들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자료도 문항 출제의 소재로 사용된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자료를 익히는 방식으로 수험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3)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다음은 자료해석영역에서 수험생이 알아야 할 평가항목의 일반적인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은 편의상 분류해 놓은 것이며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는 이들 여러 항목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다.

평가항목	측 정 내 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는 의사전달의 내용이나 자료, 기호의 의미를 다른 소재와 관련짓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도표를 보고 이것을 언어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도표 속의 내용을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이 여기에 속한다.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개념이나 방법, 절차, 원리, 법칙 그리고 일반화된 방법 등을 특수한 장면이나 구체적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법칙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표나 그래프를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자료수집의 방법과 절차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자료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그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외적인 현상 밑에 잠재되어있는 아이디어 혹은 조직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 자료에서 가설과 증거사이의 관계, 부분과 부분사이의 관계,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 관계있는 자료와 관계없는 자료를 식별하는 능력 등이 분석력에 해당된다.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 및 주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를 판단하고, 자료를 통합하여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는 능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 주어진 기준에 비추어 자료에서 얻어진 주장이나 결론자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 역시 평가하게 된다.

(4) 학습방법

- 자료해석영역은 종래의 과목별 평가와 달리 특정 과목이나 해당 학문분야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시험처럼 효과적 수험방법을 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래의 항목별 기본 학습방법을 참작하여 준비한다면 시험을 치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 수치, 표, 그래프 그리고 통계치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이 자료해석 영역의 문제 해결에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학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필요하지 않지만, 통계적 개념을 갖추고, 수치, 도표 통계자료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익숙해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평소애 정부에서 발표되는 자료나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자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기르고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과 언론매체에서 내린 결론이나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제대로 작성된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다양한 수치자료 및 표 그리고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다.
- 자료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비율이나 백분율의 산출 등 자료를 직접 계산하고 조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많은 계산을 하기보다는 자료 내에서 각 부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규칙을 스스로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복잡한 표나 그래프에서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또는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 주어진 자료를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나아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훈련, 자료가 가진 전체적인 경향을 읽어내는 훈련, 그리고 주어진 자료와 조건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보고 이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 자료해석영역의 경우 대부분 각 평가항목 간 그리고 문제유형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각 평가항목과 문제유형이 중첩·혼합되어 출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이 문제의 평가항목과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따로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 대학교양 수준의 폭넓은 독서와 관심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참고사항

- 대학 교양수준을 넘는 전문용어 및 개념이 문제에서 사용될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설명할 것이다.
- PSAT의 문제풀이 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

3. 상황판단영역

(1) 영역의 정의

- 상황판단영역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대안)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측정한다.

(2) 문항 구성의 소재

- 상황판단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지문)의 소재는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접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 공공정책 등을 문항(지문)으로 사용한다.
- 문항(지문)의 소재를 다양화 한 것은 수험자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하여 그 능력을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대학교양수준의 지문을 사용한다. 단,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각주 등을 사용하여 그 개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3) 평가항목의 주요내용

다음은 상황판단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출제될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

평가항목	측정내용
이해력	▪ 제시된 상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및 주어진 개념/원리들을 새로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추론력	▪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추리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의 실행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분석력	▪ 여러 형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평가력	▪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은 각각 이전 단계를 전제로 하는 점증적 과정이므로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평가항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4) 학습방법

- 상황판단영역은 기본적으로 특정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정분야의 지식을 습득·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으로 판단·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해력 항목은 주어진 정보 속에 숨어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평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 추론력 항목은 우리가 해결하기로 정한 문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 항목에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등을 통해 정보 속에 숨어 있는 요인들을 끌어내고, 이들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를 모델화 하는 훈련을 반복해 보는 것이 좋다.

- 분석력 항목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대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최적(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기법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기법에 대한 개념과 논리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이 주는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통찰력과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을 반복해 보는 것이 좋다.
- 평가력 항목은 최종적으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내고 대안의 시행결과를 평가·환류 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고, 여러 기준을 통해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훈련을 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훈련은 역시 타 항목과 마찬가지로 평소 주변의 현상에 대해 분석적·평가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III. 영역별 예제문제 및 해설

아래 예제는 비교적 각 항목에 잘 맞는 사례이다. 보다 다양하게 변형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실제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1. 언어논리

<예제 1> 지문 내용에 비추어 남아공 도시 빈민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남아공을 여행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그곳에는 서유럽의 풍요로움과 아프리카의 비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충격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산과 해변, 정돈된 도시 기반 시설과 쾌적한 주택가, 화려한 쇼핑몰, 거리를 달려가는 유럽의 고급 자동차 행렬이 그대로 서구 선진산업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공항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거대한 빈민촌이 들어서 있다. 케이프타운의 인구 350만 명 중 100만 명이 생계 수단이 없는 빈민이다.

케이프타운의 경제의 기둥은 제조업이 아니라 관광, 해운 및 농업이다. 도시빈민에게 일자리를 전혀 줄 수 없는 구조다.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다른 대도시도 무작정 몰려드는 빈민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1994년 만델라 혁명으로 남아공의 악명 높은 흑백 분리 정책(apartheid)이 철폐된 후 생기는 후유증이다. 흑인의 자유로운 거주 이전을 막았던 족쇄가 풀리자, 도시 빈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 정권 출현 후 투자는 줄어들었다. 일자리는 줄어들는데 도시 빈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하나의 국가 단위로 볼 때 남아공의 신상명세는 대단하다. 남한의 12배나 되는 국토는 사막도 있지만, 4500만이 먹고살기에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석유를 뺀 모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의료, 원자력, 석탄화학 기술은 세계 첨단을 달린다. 그런데 남아공 인구 1500만 명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남아공 경제가 500만 유럽계에 의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남아공 사회는 유럽계를 내쫓을 수도 없다. 여러 대에 걸쳐 그들은 남아공 원주민이 되었던 것이다.

- ① 제조업의 취약성 ② 흑백 분리 구조의 잔존 ③ 흑백 분리 철폐의 후유증
④ 투자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 ⑤ 넓은 국토와 과도한 인구 증가

정답 및 해설 : ⑤

수험생은 '지문 내용에 비추어'라고 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수험생은 지문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 ⑤의 넓은 국토는 빈곤의 원인이 아니고, 도시 빈민 인구 증가는 있으나 순수한 인구 증가의 단서는 지문에 없다. ①, ②은 둘째, 셋째 문단에 각각 진술되어 있다. ④는 셋째 문단에 나와 있고, ②는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예제 2> 다음 중 지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체계라는 개념은 많은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무질서상태라는 비록 단순한 개념이건 현대의 현실주의자가 고안한 정교한 이론이건 간에 체계라는 것은 국제적인 행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주의자들은 체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얼핏 국가의 의지나 행동으로부터 독립한 듯이 기술하고 있다. 정치가는 거의 자율성이 없으며 또 획책할 여지도 없어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행위자로서 인간은 눈앞에 버티고 선 냉혹한 체계의 앞잡이에 불과하며 그러한 체계는 이해할 수 없는 기능을 갖는 하나의 구조이며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막연하게 밖에는 인지할 수 없다. 정치가들은 무수한 제약에 직면 하지만 호기는 거의 오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권력정치라고 불리는 세계규모의 게임에 열중할 뿐이며 자발적으로 규칙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결국 비판의 초점은 현실주의적 연구의 대부분은宿命론적이며 결정론적이거나 혹은 비관론적인 저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이러한 비판 중에는 행위자로서 인간과 구조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조를 보다 동적으로 파악하는 사회학에 눈을 돌리는 학자도 있다.

- ① 이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체계라는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 ② 무질서상태는 국제적 행위체로서 작용하는 체계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 ③ 현실주의자들은宿命론 혹은 결정론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 ④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체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체계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 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인들은 체계 앞에서 무기력하다.

정답 및 해설 : ⑤

⑤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문의 9-11(12)째 줄에 진술되어 있다. ①은 지문에서 언급이 없었다. ②의 경우 2-3째 줄의 내용에 비추어 “무질서 상태”가 “체계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지도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③은 지문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④의 경우 “인간은 체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체계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지는 알 수 없다.

지문의 내용이 하나의 이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문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체계”와 “유기체”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현실정치와 체계이론이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⑤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인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수험생은 선택지가 “지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예제 3> 각 단락의 주제문을 정리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정부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를 추진하고 최근 법무부의 법제정위원회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제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여 도입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 정부는 집단 소송 제도가 기업, 시장, 우리 경제 모두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 있다. 수 차례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었으나, 실제 경영 관행은 미흡한 실정이고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2000년 6월 맥켄지 조사 결과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될 경우 대내외 투자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추가 프리미엄이 24%에 달한다. 2001년 1년 미국계 회계 법인이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투명성 정도가 31위이다.

(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도 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즉, 집단 소송제의 도입은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현재 집단 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되었으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 기업들이 높은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라) 일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험과 사례가 있어 시행상의 부작용은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을 남용하는 남소 문제도 외국의 운용 사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상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 결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만, 남소 방지 장치가 집단 소송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되므로 남소의 우려와 소송 제기의 가능성 간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있었지만, 이는 집단 소송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포기하자는 논의는 아니다.

(마) 그동안 사외 이사 제도 도입 등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도 이제 선진화된 지배구조의 기본틀은 어느 정도 갖춘 상황이다. 앞으로의 지배 구조 개선은 정부의 사전적 규제 보다는 시장에 의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 소송제는 시장에 의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 ① (가) 정부의 집단 소송제 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② (나) 경제 회복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 ③ (다) 집단 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에 이득이 된다.
- ④ (라) 남소의 부작용은 충분한 방지책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마) 집단 소송제는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 지배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②

이 글은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기업들을 겨냥하여, 집단 소송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경제뿐 아니라, 기업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나)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문제도 경제 회복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이득(주식의 저평가 관련)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경제 회복 과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예제 4> 다음 글의 내용에서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주위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다. 대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얇어지며, 고도 500km 정도까지 확산되어 있다. 이런 대기에도 무게가 있다. 그렇다면 대기가 지구를 누르는 힘은 어느 정도가 될까? 놀랍게도 그 무게는 1m^2 당 약 10,000kg중, 즉 10t의 무게에 해당한다. 이 힘은 수은(Hg) 기둥을 760mm 밀어 올릴 수 있다. 물의 경우는 밀어 올릴 수 있는 높이가 10m 정도나 되며, 내부가 진공이라면 드럼통도 찌부러뜨릴 정도로 놀랄 만한 힘이다.

표준 대기압 즉 1기압은 760mmHg 또는 1.013mb에 해당한다. 이것은 10만1300Pa(파스칼)에 상당한다. 최근에 기상학에서는 그 동안 사용해 온 mb(밀리바) 대신에 hPa(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헥토란 어떤 양의 10^2 배, 즉 100배를 나타내는 접두어다. 1Pa이란 $1\text{N}/\text{m}^2$ 의 압력을 말한다. 즉 1m^2 당 1N(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1기압이면 1m^2 당 약 10만N의 힘이 된다.

- ① 1mb는 100Pa에 해당한다
- ② mmHg는 압력의 단위이다
- ③ 고도 400km는 300km보다 기압이 낮다
- ④ 고도 250km 높이에서의 대기압은 약 0.5기압에 해당한다
- ⑤ 2m^2 의 넓이에 10N의 힘이 작용하면, 그 압력은 5Pa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이 문제는 지문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할 때 그것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mb(밀리바)=hPa(헥토파스칼)이고, 헥토란 100배를 나타내는 접두어이므로 ①은 성립한다. “1기압이 760mmHg”라는 것로부터 ②가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얇아지며, 이런 대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은 성립한다. 1Pa이란 $1\text{N}/\text{m}^2$ 의 압력을 말하므로, $10\text{N}/2\text{m}^2=5\text{Pa}$ 이 성립하여 ⑤는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④는 지문 내용만 갖고서 이끌어 낼 수 없는, 즉 지문 내용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해서도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진술이다.

<예제 6> 아래 글의 논증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약점은?

우리지역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됨에 따라, 당국은 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의 물 사용요금을 인상했다. 가구 당 평균 수도요금이 연속해서 지난 3년간 1년에 20만원씩 인상됐다. 향후 3년 후에는 가구 당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 ① 이 글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불명확한 수치를 사용했다.
- ② 삼 년 후의 수도요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 ③ 지난 3년의 요금인상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 ④ 물의 보존 방법이 향후 3년 동안에 향상될 가능성을 간과했다.
- ⑤ 비싼 수도요금이 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했다.

정답 및 해설 : ③

향후 3년 동안 당국이 지금과 같은 수도 요금 정책을 펼 것이란 가정을 하지 않는 한 지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③이다. ④, ⑤는 결함일 수 있다. 그러나 ④, ⑤를 가정하고도 향후 3년 간 요금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렴 비싼 수도요금이 물 사용을 억제하더라도 수도요금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③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지난 3년 간 가구 당 평균 수도요금 인상분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인상이 추후 3년 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지문의 주장이 성립하기 때문에 즉 3년 후의 인상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의 경우 불명확한 수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예제 7> <보기>의 내용을 삽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보기 >

- ㄱ. 즉 사회의 지배 계층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나타난 것이다.
- ㄴ. 지식과 정보 접근의 평등을 목적으로 공적 정보 봉사 확대를 위해 출발한 공공도서관이 그 존립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 역할이 달리 부과되어 생존해 왔다. ㉓ 공공도서관이 서구에서 처음 출현한 것은 인류의 삶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19세기 영미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사회에 탄생되었다. ㉔ 그 이후 공공도서관은 무료성, 공개성, 공비성(公費性)의 원칙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㉕ 그러나 오늘날 지식과 정보의 상업화, 사유화 현상의 가속화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 지식과 정보 접근의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동안 지켜오던 공공도서관의 존립 이념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민간 정보업자에 의한 사적 부문의 정보에 대한 투자증가와 공공 영역의 예산 삭감 등으로 공적 정보 영역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㉖ 모든 사회적 기관은 그 지역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나 도구를 마련하며, 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배치하게 된다.

- ① ㉓ - ㉔ ② ㉔ - ㉕ ③ ㉕ - ㉖ ④ ㉔ - ㉓ ⑤ ㉕ - ㉖

정답 및 해설 : ①

내용 분석을 통해 보기 지문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으면 된다. 문맥상 ㄱ의 경우 사회적 평등을 언급한 다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ㄴ의 경우 공적정보영역의 위축 현상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이다.

<예제 8> 아래 글의 논증 구조를 바르게 분석한 것이 아닌 것은?

㉠사람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살기 힘들다. ㉡진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소로 볼 때
도 그렇다. ㉢예를 들어 뇌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비타민 B₁₂는 고기나 계란에만 있다.
㉣또 채식만 하면 빈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철분은 육류 속
의 철 성분인 헴철(철을 함유한 헤모글로빈)에 비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4분의 1
밖에 안 된다.

- ① ㉠은 이 글 전체의 주장이다.
- ② ㉡은 ㉠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은 ㉡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이다.
- ④ ㉣은 ㉡에 대한 논거가 된다.
- ⑤ ㉤은 ㉣을 반증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 ⑤

각 문장이 논증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이는 글의 형식에 따라 전제와 결론의 추론 형식을 띠 수 도 있다. 논증에서 그러한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을 (글 일부의) 주장으로 간주할 때, ㉡이 그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 내지 이유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처럼 ㉡이 ㉤을 반증한다고 볼 수 없다.

<예제 9> 다음의 진술들 중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 ㄱ.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 ㄴ. 나의 이모는 남자 형제가 있다.
- ㄷ. 나의 아버지와 고모는 남매관계이다.
- ㄹ.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 ㅁ. 내가 철수의 사촌이라면, 철수는 나의 사촌이다.

- ① ㄱ, ㄴ, ㅁ - ㄷ, ㄹ
- ② ㄱ, ㄷ - ㄴ, ㄹ, ㅁ
- ③ ㄱ, ㄷ, ㅁ - ㄴ, ㄹ
- ④ ㄱ, ㄹ - ㄴ, ㄷ, ㅁ
- ⑤ ㄱ, ㅁ -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③

ㄱ, ㄷ, ㅁ은 총각, 남매, 사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의해 참이 보장되는 진술들이나 반면, ㄴ, ㄹ은 경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다. 가령 ㄱ의 “총각은 결혼하지 남자이다”는 총각의 정의에 의해 참인 진술이다. 그러나 “영수는 총각이다”라는 진술은 실제 영수가 총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예제 10> 문맥상 ㉠~㉥을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 인적 자원 개발의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 또한 협의의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광의의 인적 자원 개발은 직업 준비 교육,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 더 나아가 평생 학습을 통하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인적 자원 개발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향상과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학습 증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시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은 생산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협의의 인적 자원 개발 개념에서 광의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
 ㉤ 협의의 개념은 주로 기업 내 교육으로 제한되는 반면, 광의의 개념은 대상이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가정, 사회, 국가로 확대된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정답 및 해설 : ③

각 진술 ㉠ - ㉤의 역할을 분석한 후 그것을 글의 구조적 흐름에 맞게 재조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문맥상 '정의 - 개념 규정 - 화제 제시 - 논의'와 같은 구조를 가지도록 배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즉,

- ㉢ 인적 자원 개발의 의미
 - ㉣ 인적 자원 개발의 의미 중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논의 제시
 - ㉠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간의 차이점에 대한 화제 제시
 - ㉡ 협의의 개념 논의
 - ㉤ 광의의 개념 논의
- ㉤ 경우, 협의의 개념에 대한 서술이 있으므로 ㉡ 이후에 놓이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은 ③이다.

<예제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민주적 정치 형태를 결정짓거나 아니면 촉진시킬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토플러(Toffler) 등이 취하는 입장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직접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민주주의가 인간 외적인 요소인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자유가 말살된 전체주의적 기술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을 예고한 견해가 있습니다. 마르크제(Marcuse) 등의 이론가들은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이 자율적이 되는 반면에 인간의 자유는 상실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기술 결정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가 아닌 기술이 정치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내적 발전 논리를 갖는 기술 체계로서의 사회 속에서 비판적 이상을 상실하고 도구적 이성만을 사용하는 기능적 수행자, 곧 일차원적 존재로 전락한다는 경고가 기술 결정론의 논리적 구조에 훨씬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술과 사회는 전 역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때로 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사회가 기술 발전에 미친 영향보다 훨씬 더 심대하거나 또는 그 역이 성립할 때가 종종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과 사회는 상호 작용해 왔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 상호 작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정보 통신 기술과 정치 형태의 상호 관계는 보다 동태적으로 이론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혹은 전체주의를 결정지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형태가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정보 통신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가능한 한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분배, 활용,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당연히 한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 정치 발전 수준, 경제 구조 및 국제적 상호 의존성의 정도에 관한 논의를 포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정보 통신 기술의 사회·정치적 활용의 방향과 목적을 상당 부분 조건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은 또한 독자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회·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잠재력을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은 인간의 인식이 포착할 수 없는 또 다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본래의 역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기술의 잠재력은 상호 작용 패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일반화도 어렵습니다.

- ①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 ② 권위 있는 기존 이론을 논거로 삼아 논의를 타당성을 높였다.
- ③ 새로운 발상을 통해 기존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였다.
- ④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저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 ⑤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이론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으로 이끌어내었다.

정답 및 해설 : ④

필자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④이다. 다른 선택지의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①의 경우, '다양한 이론'은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 ②의 경우,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의 경우, 필자가 '기존 의견'을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에서 나온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⑤의 경우, 기존 이론이나 필자의 주장 모두 대등한 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 이론의 구체화로 볼 수 없다.

<예제 12>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관료제는 자기보존 및 세력확장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관료제는 권한 행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여 이른바 제국 건설(empire building)을 기도한다. 이러한 경향을 관료제의 제국주의라고도 부른다.
-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도(程度)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규의 필요성에 대한 과잉동조(overconformity)현상과 목표와 수단의 대치(代置)라는 현상이 빚어진다. 즉, 관료들은 목표보다는 그 수단인 규칙이나 절차를 더 중요시한다.
- 관료들은 공식적 권한을 자신들의 개인적 권력과 이익을 신장하고 옹호하는 데 쓰려 한다. 그들은 자의적(恣意的) 행동을 일삼는다. 따라서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능력이 모자라고 지위가 불안한 관료들은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비개인성을 과장하여 냉담하게 행동하며 비공식적인 접촉을 피하려 한다.

- ① 관료제의 권력남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증거 역시 존재한다
- ② 관료제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전체적인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관료제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개인적 견해에서 비롯된다
- ③ 관료제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고 관료제는 대내외적인 각종 통제장치(정보공개, 내부고발자보호 등)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
- ④ 관료제의 법규화가 목표대치를 초래할 수 있지만, 법규가 없어 예측성, 안정성, 지속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 사회는 더 큰 불균형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 ⑤ 관료제의 규모나 기능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국민들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관료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답 및 해설 : ②

①은 셋째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③, ⑤는 첫째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④는 둘째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 “관료제의 제국 건설”이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즉, 통제를 수반하는 제국 건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②는 지문에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보기 어렵고 비판의 근거 또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예제 13> 다음 뉴스를 듣고 아래 다섯 사람이 보인 반응 중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술이 약한 사람들은 술을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럽의 한 노인병연구소는 술을 잘 하는 사람에게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관찰되는 효소 Y가 알츠하이머병과 관계가 깊은 유독 효소의 분해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구소 측이 40-70대 2,400명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효소 Y의 움직임이 약한 사람은 문제의 유독 효소를 더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술이 약한 사람들은 효소 Y의 활동도 약하기 때문이다.

<보기>

문사: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다.

경이: 술을 무리하게 마신다고 알츠하이머 예방효과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철삼: 주량을 줄인다고 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일: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다.

종오: 술에 쉽게 취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다.

- ① 문사 ② 경이 ③ 철삼 ④ 수일 ⑤ 종오

정답 및 해설 : ①

알츠하이머는 효소 Y의 활동과 관계가 있는 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효소 Y의 활동이 꼭 약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의 경우, 효소 Y의 활동이 과도한 음주로 생성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의 경우, 효소 Y의 활동은 술을 섭취하는 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④는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⑤의 경우, 술에 약한 사람은 효소 Y의 활동도 약하므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다.

2. 자료해석

<예제> 다음은 세계 어느 지역들의 1년 간 기후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보고 아래의 진술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표> 세계 각 지역의 기온 및 강수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A지역	평균기온(℃)	9.5	9.7	11.8	15.3	20.2	24.6	26.9	26.6	23.3	18.4	14.4	11.4	17.7
	강수량(mm)	46.1	51.1	43.3	29.2	18.6	10.7	4.5	4.5	12.1	51.6	53.8	66.1	391.6
B지역	평균기온(℃)	20.1	23.2	27.7	30.3	30.8	30.2	29.2	29.1	29	27.9	24.7	20.7	26.9
	강수량(mm)	15.1	24.2	32.8	56.4	123.5	291.7	374.9	345.7	295.9	133.4	23.2	12.3	1729.1
C지역	평균기온(℃)	-2.5	-0.3	5.2	12.1	17.4	21.9	24.9	25.4	20.8	14.4	6.9	0.2	12.2
	강수량(mm)	21.6	23.6	45.8	77.0	102.2	133.3	327.9	348.0	137.6	49.3	53.0	24.9	1344.2

- ① A지역은 여름철에 고온건조하고 겨울철에 다습한 특징을 보인다
- ② B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난다
- ③ B와 C지역은 여름철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쌀농사에 적합한 고온다습한 기후인 것으로 보인다.
- ④ C지역은 A와 B지역에 비해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특징을 보인다.
- ⑤ 여름(8월 기준)과 겨울(1월 기준)의 기온 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C-B-A의 순이다.

정답 및 해설 : ⑤

- ① A지역은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반면 여름에는 강수량이 적고 온도는 높다. 참고로 이 지역은 그리스의 아테네로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하는 지역이다.
- ② B지역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온의 변화는 그다지 없지만 강수량의 변화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표는 인도의 캘커타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 ③ 두 지역 모두 여름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고온다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C 지역은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 ④ 표에서 기온 변화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 ⑤ 여름(8월 기준)과 겨울(1월 기준)의 기온차는 가장 큰 지역에서부터 C-A-B의 순서이다. A지역의 기온차 -17.1℃, B지역의 기온차 -9℃, C지역의 기온차 -27.9℃로 C-A-B의 순서이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예제> 다음은 A국의 대외교역현황표이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표 1> 대외교역 추이

(단위 : 백만불)

연도 \ 구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1998	9,432	7,779	-1,653
1999	10,184	8,459	-1,725
2000	10,729	9,202	-1,527
2001	10,340	9,250	-1,090

<표 2> 대 한국 교역 추이

(단위 : 백만불)

연도 \ 구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1998	75	172	97
1999	105	169	64
2000	131	202	71
2001	160	177	17

<보 기>

- ㄱ. 한국은 A국과의 교역을 통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다.
- ㄴ. 대외교역에 있어 A국은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ㄷ.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A국의 대외교역 전망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 ㄹ. A국의 교역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역적자 문제도 해결기미가 보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③

- ㄱ. 한국은 무역흑자가 확대된다기보다는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ㄴ.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ㄷ.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ㄹ. A국의 교역규모는 매년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00년에서 2001년 사이는 줄어들었다.

<예제> 다음 표는 2000년 1/4분기에서 2002년 3/4분기까지의 소비자 동향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진술 중 맞지 않는 것은?

<표>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면도 구분	2000				2001				200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기 전망지수	99	100	70	59	66	87	71	94	123	119	115
생활형편 전망지수	95	97	88	68	82	90	85	94	105	103	101

○ 소비자동향지수란 현재의 경기나 생활형편이 6개월 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표의 각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 경기전망지수 = $\frac{n_1 \times 1.0 + n_2 \times 0.5 - n_3 \times 0.5 - n_4 \times 1.0}{\text{전체응답가구수}} \times 100 + 100$

○ 생활형편전망지수 = $\frac{n_1 \times 1.0 + n_2 \times 0.5 - n_3 \times 0.5 - n_4 \times 1.0}{\text{전체응답가구수}} \times 100 + 100$

n_1 :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
 n_2 :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
 n_3 : 다소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
 n_4 :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

- ① 경기와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2000년 4/4분기에 가장 부정적이다
- ②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아지는 시기는 2001년 1/4분기부터이다
- ③ 생활형편전망지수는 경기전망지수보다 변화폭이 크지 않다
- ④ 경기전망지수와 생활형편전망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 ⑤ 모든 응답자들이 경기나 생활형편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다면 그 때의 소비자동향지수는 0이다

정답 및 해설 : ②

- ① 이 시기의 경기 전망지수는 59, 생활형편 전망지수는 68로 가장 낮다.
- ②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아지는 것은 2002년 1/4 분기 부터이다.
- ③ 경기전망지수의 변화폭은 59~123인 반면 생활형편 전망지수의 변화폭은 68~105이다.
- ④ 경기전망지수와 생활형편 변화지수의 변화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기 전망지수		↗	↘	↘	↗	↗	↘	↗	↗	↘	↘
생활형편 전망지수		↗	↘	↘	↗	↗	↘	↗	↗	↘	↘

- ⑤ 위의 공식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응답자가 n_A 즉, 경기나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다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text{경기전망지수} = \left(\frac{0 \times 1 + 0 \times 0.5 - 0 \times 0.5 - \text{전체 응답자구수} \times 1}{\text{전체 응답자구수}} \times 100 \right) + 100 = 0$$

<예제> 다음 자료는 연도별 자동차사고 발생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의 자료로부터 추론하기 어려운 내용은?

<표> 연도별 자동차사고 발생상황

(단위 : 건, 명)

구분 연도	발생건수 (건)	사망자수	10만명당 사망자수	차 1만대당 사망자수	부상자수
1997	246,452	11,603	24.7	11	343,159
1998	239,721	9,057	19.3	9	340,564
1999	275,938	9,353	19.8	8	402,967
2000	290,481	10,236	21.3	7	426,984
2001	260,579	8,097	16.9	6	386,539

- ① 연도별 자동차 수의 변화
- ② 운전자 1만명당 사고 발생 건수
- ③ 자동차 1만대당 사고율
- ④ 자동차 1만대당 부상자 수
- ⑤ 자동차 사고의 사망률

정답 및 해설 : ②

① 연도별 자동차 수 = $\frac{\text{사망자 수}}{\text{차 1만명당 사망자수}} \times 10000$

② 운전자 1만명당 사고 발생 건수를 알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수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사망자 수와의 관계(2001년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를 4,800만으로 가정하고 8,097명의 사망자 수를 이용해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16.9명이 된다.)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1만명당 사고 발생 건수를 계산할 수 없다.

③ 자동차 1만대당 사고율 = $\frac{\text{발생건 수}}{\text{자동차 수}} \times 10000$

④ 자동차 1만대당 부상자 수 = $\frac{\text{부상자 수}}{\text{자동차 수}} \times 10000$

⑤ 자동차 사고의 사망률 = $\frac{\text{사망자 수}}{\text{발생건수}}$

<예제> 아래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다음 표의 A~F에 들어갈 계열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4년제 대학 전공별 졸업자의 동일계열 취업률

(단위 : %)

연도	A		B		C		D		E		F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1970	73.74	70.26	88.88	92.70	87.98	82.90	77.81	85.40	75.05	69.11	64.48	50.96
1975	70.58	72.86	91.90	95.04	91.22	90.38	84.92	84.14	75.92	66.09	74.09	71.34
1980	68.68	70.87	93.97	95.43	88.11	91.23	79.18	80.17	77.67	70.32	72.52	74.40
1985	56.77	53.66	98.15	98.15	81.92	83.87	75.30	75.99	78.38	64.81	72.29	60.61
1990	53.25	49.68	96.83	95.62	75.23	77.74	80.00	84.56	75.46	60.80	71.05	57.26
1995	48.92	45.65	96.93	96.71	62.14	64.41	78.28	80.74	73.98	59.73	65.60	58.56
2000	43.36	43.90	96.91	96.56	75.53	78.30	80.52	84.15	69.94	60.66	59.19	56.33

<보 기>

- 예체능계는 1970년과 비교할 때 2000년의 동일계 취업률이 상승하였다.
- 사회계열 학생들은 1980년을 제외하고는 전체학생의 동일계 취업률 보다 여학생의 동일계 취업률이 낮았다.
- 1995년 이후 인문계 졸업자들은 전공과 다른 계열로 취업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 자연계는 1970년 이후 항상 남자의 동일계 취업률이 높았다.
- 사회, 의약, 사범계열 3계열의 1970년과 2000년의 동일계 취업률 변화량의 절대값을 비교하여 보면 사회<의약<사범계열 순이다.

- A B C D E F
- ① 인문계 의약계 사회계 예체능계 자연계 사범계
 - ② 사범계 예체능계 자연계 의약계 인문계 사회계
 - ③ 인문계 의약계 사범계 예체능계 자연계 사회계
 - ④ 사회계 예체능계 자연계 의약계 인문계 사범계
 - ⑤ 인문계 예체능계 사범계 의약계 자연계 사회계

정답 및 해설 : ③

이 문제는 제시된 모든 조건을 다 확인해 보아야 풀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1970년과 비교하여 2000년에 동일계 취업률이 상승한 계열은 B와 D이다. 따라서 예체능계는 이 둘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조건에서 1980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학생의 동일계 취업률보다 여학생의 동일계 취업률이 낮은 계열은 F밖에 없으므로 F는 사회계열이다. 세 번째 조건의 1990년 이후 전공과 다른 계열로 취업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계열은 A이다. 따라서 A는 인문계이다. 네 번째 조건을 적용해 보면 1970년 이후 항상 남자의 동일계 취업률이 높으려면 전체의 동일계 취업률이 항상 여자의 동일계 취업률 높아야 하므로 자연계는 E이다.

이상의 조건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B, C, D이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을 이용하면 C의 절대값의 변화량이 가장 크므로 사범계가 되며 B와 D는 의약계 또는 예체능계가 된다. 그런데 사회, 의학, 사범계열의 1970년과 2000년의 동일계 취업률 변화량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사회(5.29)<의학<사범계(12.45)이므로 의학계열의 절대값은 5.29에서 12.45사이에 있어야 한다. B변화량은 8.03이며 D의 변화량은 2.71로 B가 의학계열이며 D는 예체능계임을 알 수 있다.

<예제> 다음은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가계수지 추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표 1>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가계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월평균 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흑자율
1990	943.3	870.2	650.0	25.3
1995	1,911.1	1,732.5	1,230.6	29.0
1999	2,224.7	1,967.7	1,473.5	25.1
2000	2,386.9	2,113.5	1,614.8	23.6

<표 2> 농가 월평균소득 및 가계지출 추이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월평균 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흑자율
1990	918.8	913.8	685.69	25.0
1995	1,816.9	1,802.4	1,231.8	31.7
1999	1,860.2	1,842.0	1,426.9	22.5
2000	1,922.7	1,903.2	1,500.3	21.2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100

흑자액 = 가처분 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 = 흑자액 / 가처분소득 × 100

- ① 1980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가 농가보다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많았지만,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그렇지 않다
- ②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연도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가 동일하지만, 가장 높은 연도는 다르다
- ③ 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6.4%로 1999년에 비해 1.5%p 증가하였으며, 농가의 2000년도 평균소비성향은 1999년에 비해 1.3%p 증가하였다
- ④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평균소비성향, 흑자율 변화 추세 (전년 대비 증감 방향)가 동일하다
- ⑤ 전년도 대비 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작다

정답 및 해설 : ②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주어진 공식에 값을 대입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방법은 자료가 가진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즉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평균소비성향과 흑자율을 더하면 100이 된다는 것이다.

$$\begin{aligned} \text{흑자율} &= \frac{\text{가처분소득} - \text{소비지출}}{\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 &= \left(1 - \frac{\text{소비지출}}{\text{가처분소득}}\right) \times 100 \\ &= 100 - \left(\frac{\text{소비지출}}{\text{가처분소득}}\right) \times 100 \end{aligned}$$

즉, 흑자율은 100-평균소비성향이므로 둘을 더하면 100이 된다. 따라서 계산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평균 소비성향을 구할 수 있다.

- ① 1990년과 1995년 가처분소득은 농가가 높다.
- ② 위의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 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연도는 도시와 농가 모두 1995년이고 가장 높은 연도는 도시와 농가 모두 1980년으로 동일하다.
- ③ 위 관계를 이용하여 흑자율을 가지고 계산해도 답을 구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흑자율이1.5%p 감소하였고, 농촌근로자의 경우 1.3%p 감소하였다. 이를 평균소비성향을 바꾸면 증가한 것이 된다.
- ④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 ⑤ 월평균소득 증가율은 $(2386.9-2224.7)/2224.7=0.073$ 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의 증가율은 $(1614.8-1473.5)/1473.5=0.096$ 이다. 따라서 맞는 진술이다.

<예제> 정보통신부의 IT인력 담당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 중 연구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고르면?

'99년말 IT산업 종사자수는 113만명으로 '98년 대비 5.4%가 증가되었고, 2001년도에는 133만명에 이르는 등 IT분야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관련 직종이 1998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체 고용창출의 약 22~2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컴퓨터 전문직군이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정보통신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직종은 일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며, 특히 고학력 전문직종의 비중이 높아서 단기간의 교육 및 훈련으로는 충분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직종의 인력, 특히 전문인력의 경우 수요초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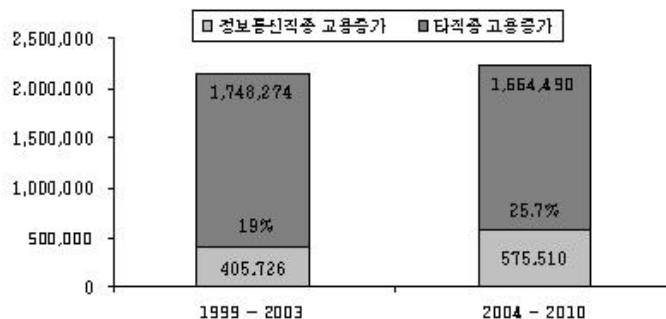
① 정보통신 산업의 고용 추이와 전망

(단위: 명)

구분	KSIC	종 별	1993	1998	2003	2013
정보통신 기기	300	사무계산 회계용 기계제조	89,757	35,837	38,473	29,872
	321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	193,308	167,605	185,913	153,141
	322	통신방송장비	34,397	29,823	33,259	27,250
	323	방송수신기	102,084	88,510	98,706	80,872
통신 및 방송서비스	642	전기통신	142,311	159,447	177,726	162,249
	921	영화 및 방송	123,911	146,634	179,475	241,306
소프트웨어	721,722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자문	46,047	95,655	244,041	689,980
	723,724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3,680	7,644	19,502	55,130
합계			735,494	731,156	978,095	1,439,808

※ 산업별 취업자수와 본 연구의 산업별 직종별 행렬을 기초로 추정된 자료임. 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721과 722, 723과 724는 원자료에 따르면 구분할 수 없었음.

② 정보통신 종사자의 고용창출 기여도 전망



③ 정보통신 관련 직종의 증가율(연 평균 %)

구분	1993 ~ 1997	1998 ~ 2010
컴퓨터 전문직	0.37	2.49
중저급 컴퓨터 전문직	0.20	1.13
전자 및 통신기술직	-0.12	0.33
생산, 조작 및 정비직	0.13	0.56
정보통신관련 관리직	0.49	0.84

④ IT 분야 고용 현황(단위 : 만명, %)

구분	'98	'99	2000	2001
IT 직종 종사자수	101	113	125	133
전년대비 증감율	5.1	5.4	5.7	6.0

⑤ 정보통신 관련 직종의 산업별 취업 구성

구분	1993	1998	2003	2010
정보통신산업 (명)	177,500	182,230	311,648	642,409
		(0.03)*		(2.53)**
비정보통신산업 (명)	696,846	837,083	1,122,720	1,346,843
		(0.20)*		(0.61)**
비정보통신산업 취업 비율(%)	79.7	82.1	78.3	67.7

*1993~1997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

**1998~2010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

정답 및 해설 : ⑤

- ① “정보통신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급속히 증대” 부분과 관련이 있다.
- ② “정보통신관련 직종이 1998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체 고용창출의 약 22~2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 과 관련 있음. 1999년~2003년까지 고용창출의 19% 그리고 2004년~2010년까지 고용창출의 25.7%를 차지하고 있어 두 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면 22.3%가 된다.
- ③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컴퓨터 전문직군이 될 것이라고 조사”와 관련 있음. 정보통신관련 직종의 증가율 중 “컴퓨터 전문직”의 증가율이 2.4%로 가장 높다.
- ④ “’99년 말 IT산업 종사자수는 113만 명으로 ’98년 대비 5.4%가 증가되었고, 2001년도는 133만명에 이르는 등 IT분야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부분과 관련이 있다.
- 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⑤번이 답이 된다.

<예제>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다음 표와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 표를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맞지 않는 것은?

<표>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의견에 대한 지지율

(단위 : %)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퇴 및 고졸		전문대졸퇴 이상		전체	
	A시	B도	A시	B도	A시	B도	A시	B도
지지율	68.9	64.5	61.1	54.0	45.0	33.5	57.9	57.7

- ① 지지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 ② 학력 수준이 동일한 경우 지역별로 지지율에 차이가 있다
- ③ 학력이 낮을수록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 차이가 적어진다
- ④ 조사대상자 중 B도 도민이 A시 시민보다 저 학력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 ⑤ 조사대상자 중 A시 시민의 수가 B도 도민의 수보다 많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⑤

①, ②, ③의 경우 간단한 계산과 눈어림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④번의 경우 만약 전체 모든 지역에서 학력별 조사대상자의 수가 동일하다면 전체 응답의 백분율은 학력별 백분율의 평균값과 동일해야 할 것이다. 즉 A시의 학력별 평균을 모두 더해서 전체 평균을 구하면 58.33이 되어야 하며, B시는 50.66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실제 평균은 달랐기 때문에 학력별 조사대상자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조사대상자의 수가 다르다면 병합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ar{X} = \frac{\bar{X}_1N_1 + \bar{X}_2N_2 + \bar{X}_3N_3}{N_1 + N_2 + N_3}$$

여기서 X_n 은 집단별 평균을 의미하며, N_n 은 집단별 사례수를 의미한다. 위의 공식에서 사례수가 많은 값이 전체 평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전체 결과는 A시의 경우 위의 값보다 낮았고(57.9), B도는 위의 값보다 높았다(57.7). 따라서 A시의 경우 학력별로 지지율이 낮은 “전문대 중퇴 이상”의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병합된 전체평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하여 B도는 학력별로 지지율이 높은 “중졸이하”의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병합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 ⑤ 조사대상자의 절대 수는 이 표에서 구할 수 없다.

<예제> 아래의 표를 보고 답지의 진술 중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을 고르면?

<표> 연도별 남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량

(단위 : 천 M/T, %)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남한															
쌀	3501	3939	4669	3550	5626	5606	5384	5331	4750	5060	4695	5323	5450	5097	5263
구성비	53.7	56.8	61.0	66.7	80.5	84.5	86.3	85.9	85.2	88.1	85.7	86.6	88.7	88.5	87.7
옥수수	40	68	54	154	132	120	75	92	82	89	74	72	87	80	79
구성비	0.6	1	0.7	2.9	1.9	1.8	1.2	1.5	1.5	1.5	1.4	1.2	1.4	1.4	1.3
북한															
쌀	1258	1480	1738	1245	1519	1457	1641	1531	1317	1502	1211	1340	1503	1461	1629
구성비	35.5	37.2	39.9	33.5	36.2	36.2	37.1	35.9	33.9	36.4	35.1	36.3	43.1	37.6	38.6
옥수수	1527	1855	2183	2035	2072	1949	2120	2112	1963	2138	1851	1976	1599	1947	1924
구성비	43.0	46.6	50.1	54.8	49.4	48.5	47.9	49.5	50.5	51.8	53.6	53.6	45.8	50.1	45.6
남/북 (단위 : 배)															
쌀	2.8	2.7	2.7	2.9	3.7	3.8	3.3	3.5	3.6	3.4	3.9	4	3.6	3.5	3.2
옥수수	0.03	0.04	0.02	0.08	0.06	0.06	0.04	0.04	0.04	0.04	0.04	0.04	0.05	0.04	0.04

- ㄱ. 남한의 곡물생산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대, 80년대에 비해 90년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 ㄴ. 90년대 들어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 높았다.
- ㄷ. 90년대 들어 남한의 쌀 생산량은 북한에 비해 최고 4배 가량 오른 적이 있다.
- ㄹ. 91년부터 96년까지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남한의 옥수수 생산량과 비교하여 4배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②

이 유형은 이해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어진 표 자체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요소를 이용한 계산을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 ㄱ. 구성비를 살펴보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ㄴ. 90년대 들어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양 구성비의 합)은 북한보다 남한이 높았다.
- ㄷ. 1996년 거의 4배에 가깝다(5323/1340=3.97).
- ㄹ. 남한이 북한의 0.04배이므로 북한은 남한의 25배인 것이 맞다.

<예제> 다음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2백 명(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결과를 옳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만 모두 옳은 것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만족' 39.4%, '불만족' 20.7%로 평가해 지난해의 '만족' 33.3%, '불만족' 26.2%보다 만족이 늘었다. 삶의 질이 '선진국 진입수준'이란 응답(30.3%)도 지난해(16.4%)보다 13.9% 높아졌다. '중진국 수준'이라는 응답은 62.1%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후진국 수준'이라고 답한 사람은 7.1%,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했다.

생활형편이 1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답은 22.7%로 '어려워졌다' 응답인 19.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어려워졌다'(35.8%)는 응답이 '나아졌다'(16.3%)는 응답보다 높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상층 2.3%, 중류층 78.9%, 하층 18.8%로 나뉘었다. 1년 전보다 상층과 하층(1년 전 각각 1.9%와 16.2%)의 소속감이 늘고, 중류층(1년 전 81.8%)의 소속감이 줄었다.

ㄱ. 올해는 작년에 비해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ㄴ. 우리나라 국민은 스스로를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ㄷ.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작년에 비해 빈부격차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 ②

- ㄱ. 일상생활에 대한 응답에서 “만족”(33.3%→39.4%), 삶의 질에 대한 응답에서 “선진국 진입 수준(16.4%→30.3%), 생활형편 “나아졌다”(16.3%→22.7%) “어려워졌다”(35.8%→19.2%) 따라서 경제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ㄴ. 중류층이 78.9%에 해당된다.
- ㄷ. 위의 자료만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예제> 다음의 자료는 소비자 경제 지수에 관한 보고자료이다.

<표 1> 소득별 소비자 기대 지수*

소득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00이상	105.7	106.5	107.1	109.0	113.8	109.8	108.7	107.1	105.3
250~299	103.7	104.2	106.9	104.1	101.2	108.2	107.7	105.0	104.4
200~249	105.5	102.4	103.8	102.2	102.6	107.5	106.5	102.8	102.7
150~199	98.0	101.3	98.5	97.3	98.0	91.5	92.7	96.2	99.7
100~149	93.7	97.8	99.1	98.8	99.3	94.2	93.4	97.0	98.9
100미만	91.2	91.7	96.1	93.0	94.7	87.2	90.0	91.0	95.3

<표 2> 각 부문별 소비자 기대 지수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	96.3	99.5	100.3	98.4	98.2	92.1	92.9	96.7	100.9
·경기	91.9	90.6	93.1	92.2	94.6	94.0	93.6	92.3	91.7
·가계생활	99.0	99.9	100.6	99.4	100.7	96.3	96.7	98.1	102.2
·소비지출	101.7	104.0	104.1	105.0	104.7	104.5	102.5	103.5	105.2
·내구소비재구매	90.5	91.7	91.4	89.7	90.3	91.6	88.4	86.9	92.6
·외식·오락·문화	91.1	93.2	95.1	93.0	92.7	89.8	90.1	91.9	95.2

<표 3> 각 연령별 소비자 기대 지수

연령	소비자 기대 지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대	99.3	104.3	105.3	104.4	106.4	99.2	99.5	101.8	105.6
30대	97.4	100.8	101.1	99.3	100.0	94.2	94.8	98.3	102.8
40대	97.5	99.9	100.4	98.4	97.7	91.3	92.1	97.0	100.3
50대	93.4	96.8	96.7	96.1	95.5	89.9	90.5	93.9	99.2
60대이상	93.9	96.9	100.3	96.3	96.0	90.0	91.8	95.3	99.5

*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100은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해 현재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수와 부정적으로 보는 가수가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100보다 크면 긍정적으로 보는 가수가 많고, 100보다 적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제> 다음은 운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중심 사업에 관한 표로서 구체적인 수치는 삭제되어 있다. 다음 표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은?

<표> 운수업 관련 4가지 중심사업

단위 : (개, 명, 억원)

업종	구분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운수수입 (매출액)
육상 운송업	2000년				
	2001년				
수상 운송업	2000년				
	2001년				
항공 운송업	2000년				
	2001년				
운송관련 서비스	2000년				
	2001년				

주)운수업 = 육상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운송관련서비스

- ① 2001년 전년대비 육상운송업 종사자 1인당 평균 급여 증감 비율
- ② 2001년 운수업 총매출액
- ③ 육상운송업이 운수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 ④ 2001년 수상운송업의 한 업체 당 평균종사자 수
- ⑤ 2000년 항공운송업 부가가치

정답 및 해설 : ⑤

이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및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주어진 답지의 요구를 확인하는 문제로서 이해항목 또는 분석항목에 해당된다.

- ① 2001년 전년대비 육상운송업 종사자 1인당 평균 급여 증감 비율은 2000년과 2001년 각각 급여액을 종사자 수로 나누어 값을 구한 후 이들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 ② 2001년 운수업 총매출액은 2001년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구할 수 있다.
- ③ 육상운송업이 운수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의 경우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값을 구할 수 있다. 육상운송업체의 수를 전체운송업체로 나누어 구성비를 구하거나 혹은 육상운송업체의 매출액을 전체운송업체로 나누어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 ④ 2001년 수상운송업의 한 업체당 평균종사자 수 역시 수상운송업 전체 종사자의 수를 수상운송업체의 수로 나누어 줄 경우 구할 수 있다.
- ⑤ 2000년 항공운송업 부가가치는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구하기는 어렵다.

<예제> 다음은 재난발생현황에 대한 2000년과 2001년의 비교자료이다. 아래의 보기와 해당하는 재난내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표> 2000-2001년 재난발생현황 비교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2000	2001	증감	2000	2001	증감	2000	2001	증감
계	330,393	301,663	28,730	444,215	400,158	44,507	794,499	706,029	88,470
화재	34,844	36,169	1,325	2,384	2,376	8	151,972	169,750	17,778
산불	729	785	56	30	20	10	65,242	2,717	62,525
붕괴	54	41	13	37	80	43	1,964	1,769	195
폭발	113	82	31	376	212	164	5,814	116	5,698
도로교통	290,481	260,579	29,902	437,220	394,636	42,584	503,651	471,005	32,646
환경오염	82	81	1	3	-	3	1	-	1
유도선(遊渡船)	-	-	-	-	-	-	-	-	-
해난	657	614	43	562	168	394	47,970	43,570	4,400
기타	3,433	3,312	121	3,603	2,666	937	17,885	17,102	783

- ㄱ. 두 해 연속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없이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ㄴ. 2000년에 비해 2001년 재난의 발생건수가 증가되었다.
 ㄷ. 전년에 비해 약24 %정도의 발생건수의 감소가 있었다.
 ㄹ. 전년에 비해 약90 %정도의 재산 피해의 규모의 감소가 있었다.
 ㄹ. 발생건수에 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가 작다.
 ㅂ.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인명피해의 규모의 증가하였다.

① 도로교통-다, 바 ② 산불-나, 다 ③ 붕괴-다, 바 ④ 폭발-라, 바 ⑤ 환경오염- 가, 마

정답 및 해설 : ③

- ㄱ. 위의 표에서 볼 때 두 해 연속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은 유도선(遊渡船)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ㄴ. 2000년과 2001년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화재(34844→36169)와 산불(729→785) 밖에 없다. 따라서 ㄴ, 는 화재와 산불에 대한 설명이다.
 ㄷ. 전년에 비해 24%정도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은 붕괴((54-41)/54=24.1%) 밖에 없으며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ㄹ. 90%이상의 재산피해 규모의 감소가 있는 항목은 각각 산불((62525/65242)×100=95.8%)과 붕괴((5698/5814)×100=98%)이다.
 ㄹ. 발생건수에 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가 적은 것은 환경오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ㅂ.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은 산불을 제외하고 모두 이다. 하지만 인명피해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붕괴 (37→80) 밖에 없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조합해 볼 때 발생재난과 설명이 맞게 연결된 것은 “③ 붕괴-ㄷ, ㅂ” 이다.

<예제> 다음은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를 나타낸 표이다. 아래의 진술문들의 참, 거짓 여부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표> 연령별 성별 임금격차

(단위 : %)

구분	계		남 자		여 자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전연령	158.8	157.8	176.3	171.6	116.0	116.2
19세미만	90.2	85.9	90.1	83.3	90.3	87.0
20~24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128.8	129.4	133.4	131.0	120.7	121.6
30~34세	161.2	163.4	165.7	163.6	138.4	142.5
35~39세	185.4	185.4	195.1	192.0	132.8	131.1
40~44세	189.1	189.3	207.4	203.5	118.7	121.0
45~49세	189.8	187.1	214.4	206.6	114.9	114.6
50~54세	180.8	176.8	203.2	196.1	109.0	107.5
55~59세	158.9	159.3	173.8	171.6	103.6	102.1
60세이상	137.8	141.1	144.2	145.3	102.5	102.2

주 : "정액 및 초과급여액" 기준임.

- ㄱ. 2001년 연령계층별로 남녀 전체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20~24세」 계층의 임금을 100.0으로 하였을 때 「45~49세」 계층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으며, 동 연령계층까지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ㄴ. 전체적으로 볼 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25~29세」 계층부터 「45~49세」 계층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30~34세」 계층까지 높아지다가 「35세 이후」 계층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ㄷ. 2000년과 2001년 남녀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54세」 이다.
- ㄹ. 남녀의 소득격차는 「45~49세」 까지 점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는 반면,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 참 | 거짓 | 참 | 거짓 |
| ② | 참 | 참 | 거짓 | 참 |
| ③ | 참 | 거짓 | 참 | 참 |
| ④ | 거짓 | 거짓 | 참 | 거짓 |
| ⑤ | 거짓 | 참 | 참 | 참 |

정답 및 해설 : ②

이 문제는 평가항목 중 이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어진 자료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ㄱ. 「45~49세」의 경우 189.8로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까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ㄴ. 남자는 「45~49세」의 연령대가 2001년 214.4, 2000년 206.6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 연령대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자는 「30~34세」의 연령대가 2001년 138.4, 2000년 142.5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 시기 이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 ㄷ. 2000년과 2001년 남녀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45~49세」이다.
- ㄹ. 남녀의 소득격차는 남자임금 수준이 최고에 달하는 「45~49세」까지는 격차가 증가하지만 이후부터는 줄어든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참이지만 ㄷ은 거짓이다.

<예제> 다음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 1> 소속정당별 지지후보

소속정당 지지후보	민주당원	무소속	공화당원	합계
공화당 후보	69 16.0%	191 53.4%	370 91.6%	630 (52.9%)
민주당 후보	361 84.0%	167 46.6%	34 8.4%	562 (47.1%)
합계	430 (36.1%)	358 (30.0%)	404 (33.9%)	1,192 (100.0%)

<표 2> 인종별 지지후보

인종 지지후보	백인	흑인	기타	합계
공화당 후보	614 59.0%	10 8.2%	6 20.7%	630 (52.9%)
민주당 후보	427 41.0%	112 91.8%	23 79.3%	562 (47.1%)
합계	1,041 (87.3%)	122 (10.2%)	29 (2.4%)	1,192 (100.0%)

- ① 흑인 유권자보다 기타 소수민족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 ② 인종이 소속정당보다 후보자 지지율에 더 영향을 미친다
- ③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강하다
- ④ 민주당 소속 흑인이 다른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가장 높다
- ⑤ 백인이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흑인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보다 강하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91.8%로 소수민족의 지지율 79.3%보다 높다. 따라서 틀린 진술문이다.
- ②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각각 자신의 정당 후보에 84.0%, 91.6% 지지하였다. 그러나 인종의 경우 백인은 공화당 후보를 59.0% 지지하고 있고, 흑인과 기타인종은 민주당을 각각 91.8%, 79.3% 지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보다는 정당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민주당원의 결속력(84.0%)에 비해 공화당원의 결속력(91.6%)이 더 크다.
- ④ 흑인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91.8%), 그리고 민주당원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84.0%)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 소속 흑인이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⑤ 백인의 공화당 선호율은 59.0%이며 흑인의 민주당 지지율은 91.8%로 흑인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도가 더 크다.

<예제> 다음은 우리나라의 세대수별 가구분포 및 연령별 인구분포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정책방향의 검토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표 1> 세대수별 가구분포

(단위: %)

연도 \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970	6.8	70.0	22.1	1.1
1980	9.0	74.2	17.8	0.6
1990	12.0	74.1	13.6	0.3
2000	14.7	73.7	11.4	0.2

<표 2>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명)

연도 \ 연령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이상 인구
1980	12,951	23,717	1,456
1990	10,974	29,701	2,195
2000	10,233	33,671	3,371
2010(예상)	10,080	35,506	5,032

$$\text{노령화지수} = \frac{\text{65세이상 인구}}{\text{0~14세 인구}} \times 100$$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65세이상 인구}}{\text{15~64세 인구}} \times 100$$

- ① 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정과 4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정을 합한 비율이 70년에 비해 2000년에는 약 1/2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급격하게 노령화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2010년에는 30년 전보다 약 4~5배 이상 노령화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③ 급격한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 ④ 노년부양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2010년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14.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⑤ 노령화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노인대상의 복지사업의 실시와 같은 정책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23.2%(22.1+1.1)에서 11.6%(11.4+0.2)로 줄어들어 약 1/2로 감소한 것이 맞다.
- ② 노령화 지수는 1980년대 11.2에서 2010년은 49.9로 나타나서 약 4~5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985년 6.6%에서 1995년 13.2%로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세계 및 한국의 인구변화』, 통계청, 2000)
- ④ 2010년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7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노년부양비 14.2%)할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예제> 다음 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세계 곡물 생산과 비료 사용

(단위 : 백만톤, 비)

연도	구분	곡물 생산량	증가분(A)	비료 사용량	증가분(B)	비료 반응(A/B)
1950		631		14		
1984		1,649	1,018	126	112	9.1
1989		1,685	36	146	20	1.8
1993		1,719	34	130	-16	-

<표 2> 세계 경제성장률

(단위 : %)

연도	구분	연간 성장	1인당 연간 성장
1950~60		4.9	3.1
1960~70		5.2	3.2
1970~80		3.4	1.6
1980~90		2.9	1.1
1990~93		0.9	-0.8

<표 3> 각국의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과 축산품 소비(1993년)

(단위 : kg)

국가	구분	곡물소비량	축산품 소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우유	달걀
미국		800	42	28	44	271	16
이탈리아		400	16	20	19	182	12
중국		300	1	21	3	4	7
인도		200	-	0.4	0.4	31	13

<표 4> 각국의 연도별 인구 추이

(단위 :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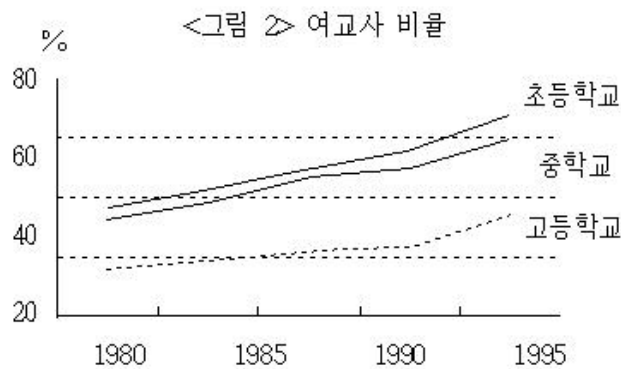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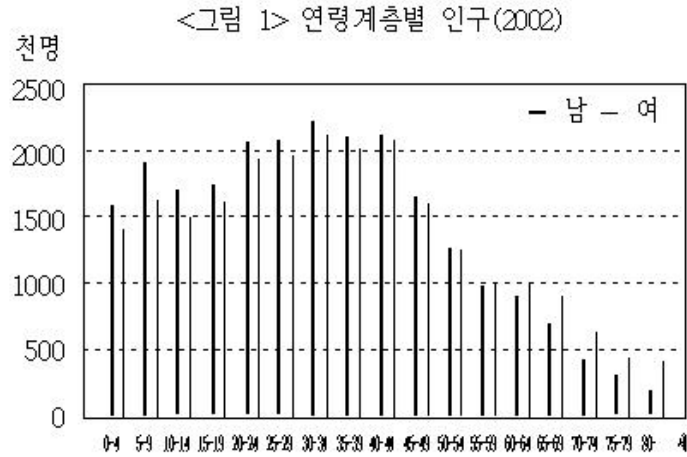
국가	연도	1950	1993	2030	인구변화	
					1950~1993	1994~2030
미국		152	250	345	98	95
일본		84	124	123	40	-1
영국		50	58	60	8	2
이탈리아		47	58	56	11	-2
나이지리아		32	87	278	55	191
멕시코		28	85	150	57	65
인도		369	853	1,443	484	590
중국		563	1,134	1,624	571	490

- ① 1993년 미국의 총 곡물 소비량은 인도의 총 곡물 소비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 ②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1인당 연간 성장률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 ③ 현재(1993년)의 세계 인구(55억)를 모두 부양하기 위해서는 1인당 곡물 소비량이 중국 또는 인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④ 1993년 미국의 1인당 곡물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의 부양인구는 약 21억에 불과하다
- ⑤ 비료의 사용으로 곡물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점차로 비료 사용량을 늘려도 곡물 수확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추세이다

정답 및 해설 : ①

- ① 이 진술문은 <표 3>에 나오는 1인당 곡물소비량과 <표 4> 제시된 각 국의 연도별 인구추이를 결합해야 판단할 수 있다. 1993년 곡물 소비량은 미국의 경우 $800 \times 250 = 200,000$ 즉 2,000억kg이 소비된 반면, 인도의 경우는 $200 \times 853 = 170,600$ 으로 1,706억kg이 소비되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다.
- ② <표 2>를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③ 이 진술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 1>의 곡물생산량과 <표 3>의 1인당 곡물사용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중국 정도의 곡물소비량이라면 $1719/300 = 5.73$ 즉 57억 30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도 정도의 곡물소비량은 $1719/200 = 8.595$ 즉 85억 9,5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다.
- ④ $1719/800 = 2.14875$ 약 21억명 정도 부양할 수 있다.
- ⑤ 1950년에서 1984년까지 비료사용량의 증가는 곡물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비료반응 9.1) 이후에는 비료사용량의 증가에 비하여 곡물생산량이 그다지 늘지 않았다.

<예제> 다음 도표는 2002년도 연령계층별 인구 및 1980년 ~ 2002년 여교사 비율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30세에서 34세의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상기의 여교사의 비율도 30세에서 34세의 연령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 ㄴ. 2002년도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를 볼 때 우리나라 인구 형태는 항아리 형태의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ㄷ. 경제활동 연령인 18세에서 59세사이의 남성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사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여교사의 수가 남교사의 수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 ㄹ. 2002년도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할 수 있다.
- ㅁ. 1990년 이후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의 증가 속도가 중학교 여교사 비율의 증가속도보다 더 높아졌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모

③ 가, 라, 모

④ 나, 다, 모

⑤ 나, 라, 모

정답 및 해설 : ⑤

가. 성별 연령대의 분포와 특정직업에서의 성별 연령대의 분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진술문이다.

나.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를 펼치면 항아리 형태를 보인다.

다. 각 교급별 교사의 인원수 또는 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진술이다. 두 개의 표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진술이다.

라. <표 1>의 연령 계층별 인구를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자의 인구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모. <표 2>의 초등학교 여교사의 비율과 중학교 여교사의 비율의 기울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여교사의 증가에 대한 기울기가 더 급하다.

<예제>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의 답지에서 적절한 설명을 고르면?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이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영학 석사학위(MBA)과정으로 선정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3년 연속 2위에 올랐고,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은 3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공동 3위였던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은 4위, 시카고대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유럽 MBA로는 프랑스의 인시아드와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 톱 10에 들었다. 유럽의 약진이 두드러져 20위안에 스위스 IMD와 스페인 레세 비즈니스 스쿨 등 유럽의 MBA과정 4개가 진입했다. 아시아 최고의 MBA로는 중국의 홍콩 이공대가 선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1백위권 안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MBA 취득 후 3년이 지난 4년차 직장인 가운데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하버드 출신이었다. 하버드 MBA는 연간 평균 17만 6천 2백 31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16만 7천 7백 50달러), 와튼 스쿨(16만 3천 10달러)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재무부분은 뉴욕대의 스텐 스쿨이 1위에 올랐다. 시카고대는 경제학(1위)과 재무부분(2위)이 강했다.

그러나 불황으로 고용시장이 움츠러들면서 한때 '고액 연봉의 보증수표'였던 미국 MBA들도 연봉이 줄어 들고 직장 얻기도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업 회계 부정 스캔들로 MBA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언론과 월드컴 스캔들에 연루된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 스킨링은 하버드 MBA출신이다. 미국의 경우 재무·금융 부문 MBA 출신의 연봉은 98년 졸업자에 비해 21%p 떨어졌고 컨설팅 부문에 진출한 MBA들의 연봉은 6%p 줄었다. 정보기술(IT)과 텔레콤 산업 종사자의 연봉은 8%p 감소했다. 미국의 톱 10 MBA 출신 가운데 12%가 졸업 후 3개월 안에 직장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8%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심지어 이번 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와튼 스쿨도 졸업생들을 위해 헤드헌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세계 MBA 과정에 대한 평가는 FT 이외에도 월 스트리트 저널·이코노미스트·비즈니스·워크포브스 등이 매년 혹은 2년마다 시행한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톱 10 MBA 순위에는 FT가 선정한 노스웨스턴·시카고·하버드·컬럼비아 외에 다트머스(1위)·미시간(2위)·카네기 멜론(3위)·텍사스(오스틴 7위)·예일(8위) 등 5개 대학이 꼽혔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는 다트머스(2위)·듀크(3위)·UCLA(7위)·IMD(8위)·버지니아(9위)·예일(10위)등 6개 과정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고 발표하였다.

- ① 매년 혹은 2년마다 시행되는 세계 MBA 과정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다
- ② 미국의 경우 재무·금융 부문, 컨설팅 부문 그리고 정보기술(IT)과 텔레콤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MBA의 평균 연봉 감소량은 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11.7%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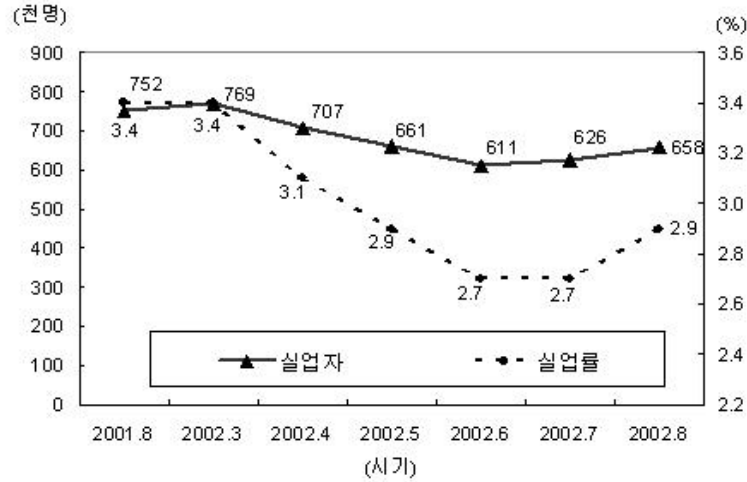
- ③ MBA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톱 10 MBA 출신자들 중 졸업 후 3개월 안에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4%p가 증가하였다
- ④ MBA 취득 후 3년이 지난 직장인 가운데 하버드 졸업생과 와튼 스쿨 졸업생의 연간 평균 소득은 15,000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
- 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MBA 과정의 학교들이 FT에서 선정한 학교들과 6개 이상 일치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 ① 다양한 기관에서 MBA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데 한 기관에서 선정한 순위와 다른 기관에서 선정한 순위가 다른 것으로 볼 때 평가기관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② 각 집단별 임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변화량의 백분율을 단순 평균하여 평균 변화량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미국의 톱 10 MBA 출신 중 졸업 후 3개월 안에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은 작년도 8%에서 올해 12%로 4%p가 증가하였다.
- ④ 위의 자료에서 계산해 보면 하버드(176,231)-와튼스쿨(163,010)=13,221달러로서 15,000달러보다는 차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이코노미스트지(誌)는 FT와는 달리 다트머스(2위)·듀크(3위)·UCLA(7위)·IMD(8위)·버지니아(9위)·예일(10위)등 6개 과정을 톱 10에 올렸다.

<예제> 실업자와 실업률에 관한 다음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잘못된 것은?

<그림> 실업자와 실업률의 변화



<표> 실업자와 실업률의 증감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구분 \ 시기	2001.8	2002.3	2002.4	2002.5	2002.6	2002.7	2002.8
실업자증감	-66	-266	-141	-119	-134	-134	-94
실업률증감	-0.3	-1.4	-0.7	-0.6	-0.6	-0.7	-0.5

- ① 2002년 8월 실업자,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94천명, 0.5%p 감소하였다
- ② 2002년 7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한 2.7%로 나타났다
- ③ 2002년 8월중 실업자는 658천명으로 전월대비 5.1%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9%로 전월대비 0.2%p 증가하였다
- ④ 2001년 5월의 실업자는 동년 6월의 실업자보다 5만명이 적은 780천명이다
- ⑤ 2001년 3월 실업자 및 실업률은 각각 1,035천명, 4.8%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이 문제에서 선택지 ①, ②, ③은 위의 표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지 ④, ⑤를 풀기 위한 자료는 직접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계산한 후 선택지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01년 실업자 및 실업률은 “<표> 실업자와 실업률의 증감”이 “전년 동월대비”를 통해 만들어진 표라는 것을 안다면 위의 “<그림> 실업자와 실업률의 변화”와 결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계산된 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시기	2001.3	2001.4	2001.5	2001.6	2001.7	2001.8
실업자증감	1035	848	780	745	760	752
실업률증감	4.8	3.8	3.5	3.3	3.4	3.4

여기서 2001년 3월 5월 6월의 값을 이용하여 판단해 보면 ④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

3. 상황판단

<예제 1>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증가와 보조금 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부 품목도 있었지만, 관세화한 품목을 비롯 우리 농업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 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방식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만,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평평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농업 협상이, 협상의 근거가 되는 도하각료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UR 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상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무역 왜곡적 보조금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 무역 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높은 수준의 관세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관세 감축 원칙이 정해진다면 우리의 경우 곡물 및 특용 작물, 양념류와 같이 현행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① 우리나라의 경우 쌀, 마늘 등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해당될 것이다.
- ② 국내 보조금이 추가로 감축되면 대신에 쌀, 보리 등의 정부 구매량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 ③ UR 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금지나 허가 제도 등 비관세수입 제한 조치를 관세화하고 관세를 축소하기로 하였을 것이다.
- ④ 감축 대상 국내 보조금은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여나가야 하는 보조금이다.
- ⑤ 허용되는 보조금의 예로는 농산물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지 정리 사업, 수리 시설 개발 등 하부 구조 건설을 위한 보조금 등이 있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②

①, ③, ④, ⑤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음. ② 쌀 구매를 위한 보조금은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 보조금이 감축되면 쌀, 보리 등의 정부구매량은 추가로 감소할 것이다.

<예제 2> 다음 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2000년도 소득분배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한 국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관한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374이고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58이었으나 미국의 경우는 각각 0.411과 0.335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소득이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公的移轉)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소득불평등도는 공적이전과 직접세 납부 이전의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이다. 한편 가처분소득불평등도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더해지고 사회보장 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이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은 세전 및 세후 그리고 공적이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 ①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사회보장부담금 및 직접세제도는 미국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성장과 분배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므로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우리나라의 시장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 시장의 분배 기능이 미국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④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장의 분배기능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계층 지원 및 소득격차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 현재까지 소득불평등도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 및 해설 : ①

- ① 우리나라의 공적이전, 사회보장금 및 직접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시행하기 전의 시장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 .374이며, 시행 후 가처분소득불평등도는 0.358로 0.016감소하였으나 미국의 그것은 0.411에서 0.336로 0.076감소하였음. 따라서 미국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답
- ② 성장과 분배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안정하고의 문제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소득분배상황의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 ③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므로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도(0.374)는 미국(0.411)보다 0에 가깝고, 이는 우리의 시장소득이 미국보다는 평등하게 분배된 것임. 따라서 미국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오답
- ④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불평등도(0.358)는 미국(0.336)보다 높아 가처분소득이 미국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분배기능이 아니라 공적이전, 사회보장, 직접세 제도 등 정부의 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⑤ 경제위기 이전의 불평등도나 그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음

<예제 3> 다음에 예시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대기 중 온실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등)는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의 연소, 산림 파괴 등 인간의 여러 활동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 속도는 지난 2만년 동안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이 복잡한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20세기 지구 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주된 원인임이 밝혀졌다.

지구 온난화의 지표인 지구 표면 온도는 온실효과로 인해 20세기에 평균 0.6℃ 정도 상승하였다. 온도 상승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온도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해양보다 육지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 온도 상승은, 관측 결과, 지난 1,000년간 유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 간은 20세기에 가장 더웠던 시기였으며 지난 100년 간 가장 더웠던 12개의 해는 모두 1983년 이후에 나타났다.

- 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서식 어종의 변화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는 반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 ② 오존층 파괴로 인해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되며, 말라리아와 더불어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산재하는 물 부족 지역에서는 대기 온도 상승에 의한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 ④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및 습지의 범람, 연안 지역의 부식 등이 예상되며 그 결과 인간 거주지, 자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⑤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한 월동 작물인 밀, 보리 등은 재배 가능 지역이 확장할 것으로 추정되나, 저온 기간이 필요한 월동 작물의 경우 그 재배 가능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 ②

- 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한반도 주변 해역내 서식어종과 어획량의 변화를 유발함
- ②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크게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되나 두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흡함.
오존층 파괴로 인한 열대성 전염병의 전세계적인 확산가능성은 낮음
- ③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증기 순환의 변환은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킴
- ④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결과적으로 인간 거주지 및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유발함
- 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은 작물의 재배에 영향을 미침

<예제 4> 다음의 혁신추진단계 중 제3단계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혁신추진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조직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는 단계, 제2단계는 분위기를 고양할 수 있는 혁신 비전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며 혁신 지원팀, 권한의 범위와 부여 방법, 평가체계 등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제3단계는 혁신 전담조직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추진하는 혁신 단기성공사례 창출단계, 제4단계는 혁신 참여 대상의 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성공사례를 확산하며 모델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는 단계, 제5단계는 고정관념 극복을 체질화하고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혁신지속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 ① 조직 내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굴된 성공사례를 책자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며, 성공 경험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혁신 목표를 조직과 개인의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혁신활동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혁신지원단을 구성하며 소속 산하기관 등과의 총·횡적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③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장·단기에 걸쳐 위협과 기회를 비교해 보며, 구성원들이 토론을 거쳐 명확하고 간결하게 혁신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④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성공사례를 한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실시하고, 도출된 혁신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대로 시행한다.
- ⑤ 혁신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진척상황표를 만들고,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혁신점검표를 제작하여, 혁신 추진과정에 대해 정기적인 진단 및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혁신경진대회, 성공사례확산 등은 혁신참여대상의 확대와 모델화 등에 해당되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제4단계에 해당됨
- ② 혁신활동평가지표, 혁신지원단 구성,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활동은 혁신인프라 구축단계이므로 제2단계에 해당됨
- ③ 혁신의 필요성, 장단기 위협과 기회분석, 혁신에 대한 정의 도출 등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단계이므로 제1단계에 해당됨
- ④ 혁신단기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혁신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시행하는 것은 혁신비전과 로드맵을 실천하는 것으로 제3단계에 해당됨
- ⑤ 혁신에 대한 점검표를 제작하고 정기적인 진단과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환류하여 혁신지속체제를 구축하는 제5단계에 해당됨

<예제 5> 다음은 핵주권(론)에 대한 논의이다.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래 전부터 국내 일각에서는 소위 '핵주권'을 옹호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핵주권은 핵무장 옹호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핵주권 주창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규정한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다.

이들은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비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에너지안보 차원,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재처리를 통해 더 저렴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해서 핵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과 핵무장 선택권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한국이 불합리하게 재처리·농축 시설 보유권한을 탈취 당했다고 보는 측은 핵주권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한다. 반면에 핵주권 논의에 반대하는 측은 우리도 재처리·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한다. 현상태에서의 핵주권 논의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 보 기 > —

- ㄱ. 비핵화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주권 논의는 한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ㄴ. 에너지안보라는 국익차원에서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ㄷ. 핵주권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다. 핵과 주권이라는 강한 이미지의 두 단어를 배합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주장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 ㄹ. 핵주권 논의를 하려면 먼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ㅁ. 현상태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비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 ㉓

- ㉑대내외적으로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한다.(O)
- ㉒에너지안보 차원에서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해서 핵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X)
- ㉔ 제시문에 해당되는 구절이 없음. 특히 국수주의와 연관된 내용이 없음
- ㉓북한 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O)
- ㉔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비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현 상태에서의 핵주권 논의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O)

따라서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주장은 ㉒, ㉔임

<예제 6> 정책 평가는 욕구 평가, 과정 평가, 평가성 사정, 결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과정 평가'의 관점에서 평가자가 물어야 할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중고 PC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에 소외되어 온 계층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부여하여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도 알려진 이 사업은 정부와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PC를 수집하고 이를 정비하여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생활 보호 대상자, 복지 시설 등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4,363대의 중고 PC를 기증받았으며, 23,305대를 1,533개 사회 복지 시설 및 단체와 5,681명의 개인에게 보급하였다.

※ 과정 평가란 사업의 목적물이 적절한 대상 집단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평가 유형을 의미한다.

- ① 기증받은 중고 PC의 수가 전년과 대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
- ② 이 사업을 통해 중고 PC를 보급받은 이들이 정보화 소외 계층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
- ③ 집행된 중고 PC 보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 ④ 이 사업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대상 집단인 정보화 소외 계층의 정보화 수요를 잘 파악하였는지?
- ⑤ 이 사업으로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받은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들이 이를 보급받지 않은 정보화 소외 계층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는지?

정답 및 해설 : ②

- ① 이 문항은 집행과정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PC의 기증이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이므로 과정평가의 대상이 아님
- ② 주어진 과정평가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PC를 보급받은 이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주어진 개념정의와 일치한다.
- ③ 이 문항은 평가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성사정에 해당됨
- ④ 이 문항은 집행과정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욕구평가에 해당됨
- ⑤ 이 문항은 PC보급사업의 효과를 묻는 것이므로 결과평가라 할 수 있음

<예제 7> 다음의 문서 작성형식을 보고, <보기> 중 바르게 작성된 것만 고른 것은?

법규문서 : 조문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훈령 :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지시 : 시행문형식, 연도표시 - 일련번호 사용

예규 :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일일명령 :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고시 : 연도표시 - 일련번호 사용

공고 : 연도표시 - 일련번호 사용

일반문서 : 시행문 또는 서식형식, 문서번호 사용

회보 : 회보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 누년 일련번호 :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번호를 말함.

※ 연도별 일련번호 :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함.

※ 연도표시 - 일련번호 :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함.

< 보 기 >

ㄱ. 충청북도훈령 제1997 - 1018호

ㄴ. 공인폐기공고 제1997 - 104호

ㄷ. 대통령령 제4354호

ㄹ. 회보 제1999 - 5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③

- ㄱ은 훈령이므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함.
- ㄴ과 ㄷ은 바른 형식임.
- ㄹ은 회보이므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함.

<예제 8> 다음 글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업무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부유세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초과순자산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제로 정의된다. 예컨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총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일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부유세는 유럽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유세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확충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면에서 국가의 세입을 늘이기 위한 목적 이외에 국민들 간에 부를 공평하게 분배해 보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유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산평가대상으로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 선박이나 항공기, 고급승용차 등의 고가의 동산, 골프장 회원권, 골동품, 사치품 등을 들 수 있다.

- ① 부유세의 개념정의에 따라 근로, 상속, 투기 등의 자산취득방법별로 과세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②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부유층의 조세저항 및 자본의 해외 도피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산정해 본다.
- ③ 부유세의 개념정의에 따라 정확한 자산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효과적인 자산 평가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 ④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부의 공평한 분배가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의 도입 전·후의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한다.
- ⑤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부유세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어떤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 본 물음의 요점은 동세제가 a) 재정확충 및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b) 일정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경우 그 초과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되 c) 그 자산의 형성 또는 축적 방법은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해제가 가능하다.
- 이미 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를 통해 취득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유세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로 인한 이중과세 또는 중과세로 인해 부유층의 조세저항 및 자본의 해외도피에 따른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면 부유세 도입취지의 달성 또는 부유세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동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 부유세의 주된 도입목적 중 하나가 부의 공평분배라고 할 때, 부유세 취지의 달성 여부는 동제도 도입 전과 후의 소득불평등도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동제도의 구체화 준비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 부유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선정, 선정된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또는 납득가능한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에서 준거할 법령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은 타당하다(㉣).
- 반면 부유세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의 형성·축적방법은 동세제와 관련 적절치 못하다(㉤).

<예제 9> 다음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보낸 의견제출통지서의 일부이다. 특허출원인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반박하고자 할 때, 의견서에서 주장할 내용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p>특 허 청 의 건 제 출 통 지 서</p> <p>이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송일자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견서 또는/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유]</p> <p>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2002. 5. 11. 출원된 것으로 도라지 열수 추출물 10 ~ 30중량%, 감미료인 자일리톨 70 ~ 90중량%로 이루어지는 캔디에 관한 것이나, 이는 한국공개특허공보 제2002 - 0000호(2002. 3. 20. 공개, 이하 인용발명이라 함)에 기재된 도라지 추출물 2중량%, 설탕 5중량%를 포함하는 음료의 기술구성으로부터 이 출원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p>
<p>대법원 판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 바, 그 진보성의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적 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7. 11. 28. 97후 1972 판결)</p>
<p>출원인 의견서: 본 출원인이 발명한 (ㄱ) 캔디는 인용발명인 음료와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다른 것이므로 음료의 기술을 캔디에 적용하는 것은 캔디가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ㄴ) 제가 발명한 캔디는 도라지가 목 건강에 좋다는 동의보감의 효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ㄷ) 인용발명인 음료와 도라지 추출물의 함량 및 감미료의 종류, 함량이 달라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ㄹ) 제가 발명한 캔디는 이미 외국과도 1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 캔디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ㅁ) 캔디는 음료보다 구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서 인용발명에 비해 목 보호에 효과적입니다.</p>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ㄹ), (ㅁ)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②

- 반론의 근거로 삼는 대법원의 판례는 기술적 구성의 차이나 작용효과, 창작의 난이정도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구성이 매우 상이하다는 주장과 작용효과가 현저히 향상 진보된 것이라는 주장이 반론으로 적절하다.
- ㉠은 새로 개발된 캔디분야의 기술과 기존의 음료분야의 기술은 상이하다는 주장이고, ㉡은 인공발명인 구성물질의 종류와 함량에서 인공발명인 음료와 캔디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고, ㉢은 그 작용효과에서 음료보다 캔디가 더 효과적인 주장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은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은 캔디의 한 구성물질(특히 음료에도 포함됨)에 대한 의학적 인용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은 캔디의 사업적 가치에 대한 근거로 적합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은 근거하지 않았다.

<예제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내용으로 아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골라 묶은 것은?

< 입법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년 2월로 끝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보유시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 사이의 출자를 금지하되,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하게 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	현행	개정안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년 2월 시한 만료	5년간 시한 연장
지주회사제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 1년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주식취득 등의 전환은 유예기간 없음	모든 전환유형에 유예기간 2년 인정
	손자회사 보유주식 처분 유예기간 없음	유예기간 2년 신설
	자회사 간 출자 허용	금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함	자회사의 지분을 (ㄱ) % 이상 보유해야 함
손해배상청구 제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전 손해청구 어려움	청구 원활화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고의, 과실 입증 책임	(ㄴ)	(ㄷ)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ㄹ)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

- | | | | | |
|---|------------|------------|------------|------------------|
| | <u>(ㄱ)</u> | <u>(ㄴ)</u> | <u>(ㄷ)</u> | <u>(ㄹ)</u> |
| ① | 30 원고 | 피고 | 피고 |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 |
| ② | 40 피고 | 원고 | 원고 |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 |
| ③ | 40 원고 | 피고 | 피고 | 매출액의 15% 또는 30억원 |
| ④ | 60 원고 | 피고 | 피고 |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 |
| ⑤ | 60 피고 | 원고 | 원고 | 매출액의 15% 또는 30억원 |

정답 및 해설 : ①

- ㉠의 경우, 개정안이 지주회사 전환을 더 쉽게 규정해야 하므로 지분율 요건이 50%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 ㉡, ㉢의 경우,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현행의 입증 책임은 원고(손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있으나, 개정안의 입증 책임은 피고(손해를 끼친 회사)에게 있어야 한다.
- ㉣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므로 현행의 과징금이 개정안의 과징금보다 더 적어야 한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임

<예제 11>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특허청의 규정을 감안할 때, S전자 특허팀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특허청은 “제 경비를 제외한 순수 실시수입액(발명을 상품화해 벌어들인 돈)의 100분의 15 이상을 발명 종업원에게 준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

- 중 략 -

이에 대해 S전자 특허팀 관계자는 “기업에 속한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 개발인데 그 성과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보상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은 1년에 보통 수천 건의 종업원 발명을 접수하며 이 중 5~10%를 상품에 응용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발명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종업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① 기업에 속한 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② 기업에서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한 예는 거의 없다.
- ③ 직무 발명에 대하여 충분한 성과급을 보장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연구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 ④ 미국 기업들은 사내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기술로 돈을 벌었을 경우 개발자들에게 로열티나 스톡옵션 등으로 수익을 나누어 주어 신기술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⑤ 회사에 수십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대 연봉의 보험사 영업 사원이 나오는 이유는 영업 활동에 따른 충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인데, 영업 활동과 연구 활동의 성과급에 대하여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②, ③, ⑤는 S전자 옹호론에 불과함
- ④는 사내연구원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례로서 S전자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반론임

<예제 12> 다음 설명을 읽고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마추어 축구단을 대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팀당 참가비'는 '팀당 예선경기 횟수 × 15만원'이다. 그리고 '경기당 축구장 대여료 및 음료수 제공 등의 경비'(비용 A)는 7만원, '팀별로 제공되는 기념품 구입비'(비용 B)는 팀당 5만원이다. 비용 A와 비용 B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한편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축구장은 3곳이며, 각각 하루에 최대 4경기를 치를 수 있다. (한 팀이 하루에 두 경기 이상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대안을 고안하였다.

	참가팀 수	예선진행 방식	본선진출 방식	본선진행 방식
		각조당 예선경기수		본선경기수
대안 1	24	각조 3개팀 풀리그	각조 1위팀 8강진출	토너먼트
		3		7
대안 2	32	각조 4개팀 풀리그	각조 1,2위팀 16강진출	토너먼트
		6		15
대안 3	48	각조 3개팀 풀리그	각조 1위팀 16강진출	토너먼트
		3		15
대안 4	48	각조 6개팀 풀리그	각조 1,2위팀 16강진출	토너먼트
		15		15
대안 5	64	각조 4개팀 풀리그	각조 1,2위팀 32강진출	토너먼트
		6		31

※ 모든 대안에 있어서 3, 4위전은 치루지 않는다.

※ 이 대회에서 풀리그란 참가한 각 팀이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과 각기 한 번씩 대전하는 방식이며, 토너먼트는 각 경기마다 패자는 탈락하고 최후에 남은 두 팀이 우승을 겨루는 방식이다.

— < 보 기 > —

- ㉠. 5개의 대안 중 팀별로 내야 하는 참가비가 최소인 것은 대안 1과 대안 3이며 그 경우 팀별 참가비는 45만원이다.
- ㉡. 대안 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참가비 수입은 1,440만원이며, 소요경비는 601만원이다.
- ㉢. 대안 4의 경우 대회 기간은 10일을 초과한다.
- ㉣. 대안 5의 경우 대안 4보다 많은 경기를 치뤄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및 해설 : ㉓

- ㉑ (X) 대안 1과 대안 3의 경우, 팀당 예선 경기 횟수는 2회이고, 따라서 참가비는 $2 \times 15 = 30$ 만원이다.
- ㉒ (O) 대안 2의 경우, 팀당 예선 경기 횟수는 3회이고, 참가비는 $3 \times 15 = 45$ 만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참가비 수입은 $45 \times 32 = 1,440$ 만원이 되고, 소요비용은 601만원(비용B : $7 \times 63 = 441$ + 비용C : $5 \times 32 = 160 = 601$)이다. 총 경기수 : 63경기(예선 : $8 \times 6 = 48$ + 16강 : 8 + 8강 : 4 + 4강 : 2 + 결승 : 1 = 63)
- ㉓ (O) 대안 4의 경우, 총 경기수를 계산하면 135경기가 나오는데 이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최대 경기수가 12경기임을 감안하면 10일을 초과한다. (135 > 12×10) 총 경기수 : 135경기(예선 : $8 \times 15 = 120$ + 16강 : 8 + 8강 : 4 + 4강 : 2 + 결승 : 1 = 135)
- ㉔ (X) 대안 5의 경우, 총 경기수는 127경기이다. 총 경기수 : 127경기(예선 : $16 \times 6 = 96$ + 32강 : 16 + 16강 : 8 + 8강 : 4 + 4강 : 2 + 결승 : 1 = 127)

<예제 13> 선거관리위원회의 김 사무관은 총선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투표방법을 조사하였다.

단순다수투표: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할 수 있고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

결선투표: 단순다수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

찬성투표: 좋아하는 후보가 몇 명이든 찬성표를 던지고 찬성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선호투표: 유권자가 모든 후보에게 순위를 매긴다. 그중 1순위만 집계하여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한 유권자의 2순위 지지표를 해당 득표자에게 나누어 주어 최종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점수투표: 마음에 드는 후보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15명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구에 갑, 을, 병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이때 갑>을>병 후보 순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6명, 을>병>갑 후보 순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4명, 병>을>갑 후보 순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5명이었다. 각 투표 방식에 따른 당선자가 올바르게 않은 것은?(단, 유권자는 지지하는 순으로 투표를 한다.)

- ① 단순다수투표 방식을 이용하면 갑이 당선된다.
- ② 결선투표 방식을 이용하면 병이 당선된다.
- ③ 찬성투표 방식으로 유권자가 2순위 지지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면 갑이 당선된다.
- ④ 선호투표 방식을 이용하면 병이 당선된다.
- ⑤ 점수투표 방식으로 유권자가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준다면 을이 당선된다.

정답 및 해설 : ③

- ① 단순다수투표방식 : 갑 6표, 을 4표, 병 5표 → 갑 당선(O)
- ② 결선투표방식 : a) 단순다수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 없음. b) 1, 2위인 갑과 병으로 다시 투표하면 '을'을 1순위로 지지한 유권자 4명 모두 병을 지지하게 되어 최종결과 갑 6표, 병 9표로 병 당선(O)
- ③ 찬성투표방식 : 2순위 지지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 (갑, 을) 6명, (을, 병) 4명, (병, 을) 5명으로 최종 갑 6표, 을 15표, 병 9표가 되어 을 당선(X)
- ④ 선호투표방식 : a) 1순위 집계결과 갑(6), 을(4), 병(5)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 b) 최하위 득표자 '을'을 지지한 유권자 4명의 2순위 지지후보인 병이 4표 획득, 최종적으로 갑 6표, 병 9표가 되어 병 당선(O)
- ⑤ 점수투표방식 :
 갑 : $3 \times 6 + 1 \times 4 + 1 \times 5 = 27$ 을 : $3 \times 4 + 2 \times 6 + 2 \times 5 = 34$ 병 : $3 \times 5 + 2 \times 4 + 1 \times 6 = 29$ 을 당선(O)

<예제 14> 공정거래위원회의 김 사무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과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서 제시되고 있는 HHI지수(허핀달 - 허쉬만 지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기> 중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취지로 법률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단,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한편, 학계에서는 시장의 집중도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HHI지수를 이론적 분석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합병가이드라인에서도 20년 전부터 산업 집중도의 척도로서 HHI지수를 사용하였다. HHI지수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한 값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시장을 두 개 기업이 같은 비율로 양분하고 있는 경우 HHI지수는 $0.5 \times 0.5 + 0.5 \times 0.5 = 0.5$ 가 된다.

< 보 기 >

ㄱ. 1, 2, 3, 4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30%, 8%, 5%인 상황인 경우 3위 사업자는 현행 법률의 규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ㄴ. ‘ㄱ’의 경우에서 3위 사업자가 4위 사업자와 합병하게 되면 3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ㄷ. ‘ㄴ’에서 합병 전보다 합병 후에 HHI지수는 크다.

ㄹ. 1, 2, 3, 4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40%, 10%, 10%인 상황(상황 1)과 30%, 30%, 30%, 10%인 상황(상황 2)이 있을 때, HHI지수에 따르면 상황 1의 시장 경쟁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ㅁ.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0%인 경우 HHI지수는 가장 큰 값을 갖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 ④

- ㉠ (○) 시장점유율이 8%인 3위 사업자는 단서 조항의 100분 10미만에 해당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 ㉡ (○) 시장점유율 3, 4위가 합병하면 13%가 되고, 100분의 10이상이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된다.
- ㉢ (○) 합병 전 HHI 지수 : $0.4 \times 0.4 + 0.3 \times 0.3 + 0.08 \times 0.08 + 0.05 \times 0.05$
합병 후 HHI 지수 : $0.4 \times 0.4 + 0.3 \times 0.3 + 0.13 \times 0.13$
∴ 합병 후 HHI 지수가 더 크다
- ㉣ (X) 상황 1의 HHI 지수 : $0.4 \times 0.4 + 0.4 \times 0.4 + 0.1 \times 0.1 + 0.1 \times 0.1$
상황 2의 HHI 지수 : $0.3 \times 0.3 + 0.3 \times 0.3 + 0.3 \times 0.3 + 0.1 \times 0.1$
∴ 상황 1의 집중도가 더 크므로 상황 2가 시장 경쟁의 정도가 더 크다
- ㉤ (○) 집중도가 가장 큰 값은 1이며, 1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때 나타난다.

<예제 15> (가)의 입장을 견지한 국회의원이 (나)의 민법조항과 관련하여 호주제 존치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예측한 것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민법」 제984조에 의하면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손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③ 피승계인의 처(아내),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로 되어 있다.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夫)의 가(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夫)가 처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부(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84조에는 부(夫)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처가 부(夫)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夫)의 동의를 얻어 그 가(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① 재혼가정의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 편법으로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
- ② 이혼한 어머니와 사는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
- ③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으므로 일가(一家)창설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④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 순위로 인하여 남아선호 사상의 확산 및 고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 ⑤ 처의 혼인외 자녀의 호적 입적 시 남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을 수 있어 아동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정답 및 해설 : ③

- ① 민법 제784조 제1항에 따르면 부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은 부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나 성은 바꿀 수 없으므로(민법 제781조 제1항-성은 출생시 생부의 성을 따른다),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
- ② 자녀는 이혼 전의 남편의 호적에 속해 있는데(민법 제781조 제1항) 이혼한 어머니는 그 호적에서 제적되므로(민법 제826조 제3항) 호적은 다르고, 다만 같이 산다면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의 형태가 된다.
- ③ 아버지가 외국인의 경우 모가에 입적이 가능하므로(제781조 제1항) 굳이 일가창설을 할 필요가 없다.
- ④ 민법 제984조에 따르면 호주 승계가 남성을 우선으로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남아선호가 유지되고 성비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 ⑤ 민법 제784조 제1항에서는 처의 혼인외 자녀의 호적 입적시 부의 동의를 전제하므로 그 자녀의 생부를 모를 경우에는 아동이 입적할 호적이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예제 16> 비행·범죄소년들을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하에 두면서 일정 기간마다 보호관찰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보호관찰(community-based probation)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의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은 교정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사회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바람직한 선도가 가능하다.
- ②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면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직접교정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 ③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설수용 관리가 용이해진다.
- ④ 재범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⑤ 시설내 수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족·지역사회·학교와의 유대관계 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유용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받는 수강명령제도와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서의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를 시도함
- ② 시설 내 수용의 경우에 필요한 의식주 제공과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면 줄일 수 있음
- ③ 수감자가 증가하면 수용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킴
- ④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은 보호관찰제도의 폐지나 소극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다른 항목들과 정반대임
- ⑤ 시설 내 수용의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사회제도들과의 관계손상에 대한 우려를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음

<예제 17>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상거래의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의 나경제 사무관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음을 발견했다. 다음에서 세제지원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제지원에 대한 반론	ㄱ. 외국의 입법례가 없음 ㄴ.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자발적임 ㄷ. 위장 전자상거래로 조세수입이 감소함 ㄹ. 오프라인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함 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는 기여도가 낮음
반론에 대한 반박근거	a.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역량이 부족함 b.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함 c. 개별 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결정은 쉽지 않음 d.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음 e. 과표양성화 효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함

- ① ㄱ - d
- ② ㄴ - c
- ③ ㄷ - e
- ④ ㄹ - a
- ⑤ ㅁ - b

정답 및 해설 : ④

- ①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 IT기술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이며 따라서 관련 입법과 정책도 선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재반론이 가능함
- ② 전자상거래가 자발적인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개별기업이 처한 현실-관련 자금, 인력, 기술의 부족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결정은 쉽지 않으며, 이런 이유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재반론이 가능함
- ③ 위장 전자상거래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론은 의미있지만 이런 반론은 과표양성화 효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면 상당 부분 무력화된다. 따라서 재반론으로 유효함
- ④ 오프라인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과 중소기업이 자금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 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와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는 관련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낳는다.

<예제 18> 아래 두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통상 안락사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자에게 고통스러운 삶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첫째,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와 '반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둘째, 안락사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환자 스스로 안락사 관행을 취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안락사 시켜 준 것인가에 따라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셋째, 수동적인 경우 안락사 시행주체(의사)가 약물투입 등의 수단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방치에 의해 죽게 한 것인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나. 안락사에 고려될 수 있는 도덕적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ㄱ) 안락사는 환자의 희망에 따른 자의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안락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ㄷ) 안락사는 죽음을 결과하므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신생아나 의식이 없는 식물상태의 사람들에게 자의적·능동적 안락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나 반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 ③ (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나 반자의적·수동적·소극적 안락사를 도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④ (ㄱ)과 (ㄴ)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ㄱ), (ㄴ), (ㄷ)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의적·수동적·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⑤

- ① 신생아나 식물상태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안락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의적·능동적 안락사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없다.
- ② 수동적·적극적 안락사는 시행주체인 의사가 약물투입을 통하여 환자를 죽음에 다다르게 하므로, 그것이 살인이나 아니냐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③ (ㄱ)을 받아들이면 환자의 자의적 동의를 필요하므로 반자의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 ④ (ㄱ)과 (ㄴ)을 받아들이면 안락사의 전제조건으로 자의적 동의를 있어야 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이익만 확보된다면 자의적이면서 의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수동적) 약물투입과 같은 적극적인 안락사도 가능하다.
- ⑤ (ㄱ), (ㄴ), (ㄷ)을 모두 받아들이면 특히 (ㄷ)에 의해 수동적·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존중의 원칙은 타인에 의한 안락사를 금지하므로 수동적 안락사가 불가능하고, 죽음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하므로 소극적인 안락사도 불가능하다.

<예제 19> 한 국가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공격성 중시전략과 매력도 중시전략으로 나누어진다. <보기>에서 공격성 중시전략에만 해당되는 정책을 고른 것은?

한 국가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공격성(aggressiveness)을 제고하는 방향과 매력도(attractiveness)를 제고하는 방향이 존재한다.

공격성 중시전략은 자국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중상주의적 성향의 진출전략이다.

매력도 중시전략은 자국을 기업 활동하기 좋은 매력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자국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개방적 유인전략이다.

공격성과 매력도에서 모두 강해질 때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보 기 >

- ㄱ.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 ㄴ.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적으로 지원한다.
- ㄷ. 전통적인 수출 기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 ㄹ.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ㅁ. 자국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확대한다.
- ㅂ. 경제특구를 만들어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저가의 부지를 제공한다.

- ① ㄱ, ㄹ, ㅂ
- ② ㄱ, ㅁ, ㅂ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 ③

ㄱ, ㄹ, ㅂ은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매력도를 중시하는 전략인 반면, ㄴ, ㄷ, ㅁ은 공격성 중시전략임.

<예제 20> 다음은 남녀평등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GDI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아닌 것은?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s : GEM)란 각국 여성들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계량화한 지수이다. 국회의원이거나 고위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근거해 산출되는 이 지수는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반면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GDI)는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남녀소득차 등 삶의 질 전반적인 면에서의 남녀평등도를 나타낸 지수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1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EM은 64개국 중 61위, GDI는 146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 ① 주부를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한다.
- ② 혼자 자식을 기르는 저소득층의 어머니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 ③ 고위공무원선발시험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
- ④ 전국 보건소에서 노인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⑤ 같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답 및 해설 : ③

- ① 주부를 위한 한글교실은 여성의 문자해독률과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관련됨
- ② 독신모 가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관련됨
- ③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고위직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므로 GEM을 개선시킴
- ④ 여성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여성의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관련됨
- ⑤ 동일직종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남녀소득차를 줄이는 데에 관련됨

<예제 21> 다음 상황에 대해 옳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허위 신고 등의 오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집단	상 황	신고자수 (명)	사고로 사망 했을 확률(%)
(가)	시체 또는 유골에서 DNA가 확인된 사망자	200	100
(나)	시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시 카메라, 휴대폰 위치 추적 또는 통화 내역 등으로 사고를 당한 지하철에 탑승했음이 확인된 실종자	50	90
(다)	(가), (나) 집단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품이 확인된 실종자	50	80
(라)	(가), (나), (다) 집단에 해당되지 않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	100	50

※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사고 수습의 일환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 (가) 집단만 보상하는 방안
- (가), (나) 집단만 보상하는 방안
- (가), (나), (다) 집단만 보상하는 방안
- (가), (나), (다), (라) 집단 모두 보상하는 방안

실제로 화재로 사망한 사람 1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의 크기를 'A'라고 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된 사람 1인이 보상을 받는 경우 생기는 문제의 크기를 'B'라고 한다. A를 1이라고 할 때, B를 각각 1, 0.5, 0.2, 0.1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전체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다.

< 보 기 >

- ㄱ. (가) 집단만을 보상 대상으로 할 경우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 ㄴ. A를 B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할수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다.
- ㄷ. B를 A의 0.1배로 볼 때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위에서 제시된 방안 중 (가), (나), (다), (라)의 모든 집단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 ㄹ. A와 B를 동일하게 볼 때 (가) 집단만을 보상하는 방안이 위의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전체 문제의 크기가 제일 크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⑤

주어진 표를 대안 중심으로 전환하면

상황설명(대안)	진짜희생자	가짜희생자	문제의 크기
(가)집단만 보상	200	0	135A
(나)집단만 보상	45	5	90A+5B
(다)집단만 보상	40	10	50A+15B
(라)집단만 보상	50	50	65B

- (가)집단만을 보상대상으로 할 경우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기의 (가)은 맞는 진술임
- A를 B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면 A문제를 포함하고 있는(가)(나)(다)집단까지 보상하는 방안들은 문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문제가 없는 (라)집단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가장 문제의 크기가 작은, 바람직한 방향의 대안이 된다. 따라서 (나)은 맞는 진술임
- B를 A의 0.1배로 하면 각각의 문제의 크기는 (가)집단 보상하는 경우 135, (나)집단까지 보상하는 경우 90.5, (다)집단까지 보상하는 경우 51.5, (라)집단까지 보상하는 경우 6.5가 되므로 (가)(나)(다)(라)의 모든 집단을 보상하는 방안이 문제가 최소화되므로 (다)은 맞는 진술임
- A, B를 동일하게 보면 (가)집단만을 보상할 때 문제점은 135A, (나)집단까지 보상할 때는 95A, (다)집단까지 보상할 때 65A, (라)집단까지 보상할 때는 65A이므로 (라)은 맞는 진술임
따라서 (가), (나), (다), (라)은 모두 맞는 진술임

<예제 22> A국은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현재 A국은 해외시장 개척 대상으로 B국과 C국을 고려하고 있으며 B국과 C국은 자동차의 환경친화도를 나타내는 환경점수와 성능우수성을 나타내는 성능점수를 기준으로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현재 기준으로 A국의 기술력은 환경점수 65점, 성능점수 64점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환경친화도를 높이는 연구와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며, 두 연구는 연구기간에 상관없이 각각 한번만 추진된다.)

< B국과 C국의 자동차 수입 허용 기준 >

	환경점수	성능점수
B국	69	78
C국	73	69

< 연구기간에 따른 예상 도달점수 >

	3개월	6개월	9개월
환경점수	70	74	78
성능점수	69	74	79

< 보 기 >

- ㄱ. 성능점수 5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비용은 연구기간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 ㄴ. 두 국가 중 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B국보다는 C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연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유리하다.
- ㄷ. 두 국가에 모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한 12개월의 연구기간이 소요된다.
- ㄹ. 두 국가에 모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환경친화도 연구보다는 성능우수성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한 국가 진출 후 나머지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유리하다.
- ㅁ. 두 국가에 모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C국 진출을 위한 준비가 먼저 완료되도록 연구를 진행하면 C국 진출 후 3개월의 연구기간이 더 필요하다.

※ 기회비용: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재화나 기회 가치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 ②

- ㉠ (X) 성능점수를 5점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비용은 연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연구기간 : ~3개월~6개월~9개월
기회비용 : 5점 4점 4점
(환경점수)
- ㉡ (O) 두 국가 중 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B국 진출 목표 ;
환경점수 도달 3개월+성능점수 도달 9개월=12개월
C국 진출 목표 ;
환경점수 도달 6개월+성능점수 도달 3개월=9개월
- ㉢ (X) 두 국가 모두 진출하기 위한 최소 연구기간
환경점수 : 두 국가 모두 진출하기 위해서는 73점 6개월
성능점수 : 두 국가 모두 진출하기 위해서는 78점 9개월
따라서 15개월의 연구기간이 필요함
- ㉣ (O) 두 국가 진출 목표
성능우수성 연구 선행시 ;
먼저 성능점수 78점 도달 후, 환경친화도 연구시작 3개월 후 B국 진출 다시 3개월 후 C국 진출 가능
환경친화도 연구 선행시 ;
두 국가 모두 만족하는 74점 도달 후, 성능연구 시작 3개월 후 C국 진출 다시 6개월 후 B국 진출 가능
- ㉤ (X) 두 국가 진출 목표
C국 진출 먼저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점수의 허용기준에서 C국이 B국보다 높고, 성능점수 허용기준에서는 B국이 높으므로 환경친화도 연구를 선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 두 번째 설명에 해당하므로 6개월의 연구기간이 더 필요함

<예제 23> 다음 글에 따라 두 번의 재배정을 한 결과, 병돌은 홍보팀에서 수습 중이다. 다른 신입 사원과 최종 수습 부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신입 사원을 뽑아서 1년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한 후, 정식 사원으로 임명을 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올해 신입 사원으로 두 명의 여자 직원 갑순과 을순, 그리고 두 명의 남자 직원 병돌과 정돌을 뽑았다. 처음 4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갑순은 기획팀에서, 을순은 영업팀에서, 병돌은 총무팀에서, 정돌은 홍보팀에서 각각 근무했다. 그 후 8개월 동안 두 번의 재배정을 통해서 신입 사원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수습 중이다. 재배정할 때마다 <보기>의 세 원칙 중 한 가지 원칙만 적용되었고, 같은 원칙은 다시 적용되지 않았다.

— < 보 기 > —

(원칙 1) 기획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과 총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을 서로 교체하고, 영업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과 홍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을 서로 교체한다.
 (원칙 2) 총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과 홍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만 서로 교체한다.
 (원칙 3) 여성 수습 사원만 서로 교체한다.

- ① 갑순 - 총무팀
- ② 을순 - 영업팀
- ③ 을순 - 총무팀
- ④ 정돌 - 영업팀
- ⑤ 정돌 - 총무팀

정답 및 해설 : 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여섯 가지이다. 원칙 1, 2와 원칙 2, 1에 따라 재배정하면 병돌이는 기획팀에 배정되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원칙 1, 3 또는 원칙 3, 1의 적용 결과 도 병돌이가 기획팀에 배정되게 되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원칙 2, 3 또는 원칙 3, 2를 적용하면 병돌이는 홍보팀, 정돌이는 총무팀, 갑순은 영업팀, 을순은 기획팀에 배정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임.

<예제 24> 먼 은하계에 X,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섯 행성이 있다. X 행성은 매우 호전적이어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고자 한다. 다음 진술이 참이라고 할 때, X 행성이 침공할 행성을 모두 고르면?

- ㄱ. X 행성은 델타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
- ㄴ. X 행성은 베타 행성을 침공하거나 델타 행성을 침공한다.
- ㄷ. X 행성이 감마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면 알파 행성을 침공한다.
- ㄹ. X 행성이 베타 행성을 침공한다면 감마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

- ① 베타 행성
- ② 감마 행성
- ③ 알파와 베타 행성
- ④ 알파와 감마 행성
- ⑤ 알파와 베타와 감마 행성

정답 및 해설 : ③

ㄱ과 ㄴ으로부터 X 행성은 베타 행성을 침공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선언삼단논법). 베타 행성을 침공하면 감마 행성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감마 행성을 침공하지 않으면 알파행성을 침공한다. X 행성은 베타 행성을 침공하므로 알파 행성도 침공한다(전건긍정법을 두 번 사용). 따라서 X 행성은 알파, 베타 행성을 침공하고 감마행성은 침공하지 않는다.

<예제 25> 모처럼 서류를 정리하려고 했던 회사원 P씨는 지금 꽤 난처해하고 있다. 지난달 체결한 7건의 계약에 대한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만 커피를 엷질러 자료들에 잉크가 번져서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P씨는 기억을 더듬고, 잉크가 번지지 않은 자료에 있는 단서들을 근거로 7개의 회사(A, B, C, D, E, F, G)와 맺은 계약이 어떤 순서로 맺어진 것인지 정리하려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모은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단, 위 7건의 계약 이외에 지난달에 체결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B와의 계약이 F와의 계약에 선행한다.
- G와의 계약은 D와의 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E와의 계약, F와의 계약 보다는 나중에 이루어졌다.
- B와의 계약이 지난달 가장 먼저 맺어진 계약은 아니다.
- D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 C와의 계약은 G와의 계약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

“이 정보만으로 각각의 계약이 어느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군……” P씨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번지다가 만 종이에서 발견한 단서로 그는 이 7건의 계약의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중에 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는?

- ① E와의 계약은 B와의 계약에 선행한다.
- ② B와의 계약은 G와의 계약에 선행한다.
- ③ C와의 계약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 ④ D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과 인접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 ⑤ F와의 계약은 D와의 계약과 인접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우선 주어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선후관계들로부터 추출해 보자. 네 번째와 두 번째 단서에 의해, (E, F)-G-D-A의 순서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물론 두 계약 건 사이에 얼마든지 다른 계약 건이 있을 수도 있고, E와 F의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네 번째 증거에 의해, C와 맺은 계약은 G이후에 이루어졌다. 편의상 이것을 (E, F)-G-(D-A, C)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첫 번째 단서에 의해 B사와의 계약은 F사와 계약에 선행하므로 (E, B-F)-G-(D-A, C)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순서가 E, B, F에 있어서 가능하다. E-B-F, B-E-F, B-F-E가 가능한데, 세 번째 단서에 의해, B사와의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이 아니므로, 세 경우 중에 가능한 순서 배열은 E-B-F뿐이다. 따라서 확정된 순서는 E-B-F-G-(D-A, C)이다. 결정적인 단서는 따라서 A, C, D의 배열 순서에 대한 단서가 되어야 한다. ④에 제시된 단서는, D와 A계약이 인접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④의 단서를 채택할 경우에는, A, C, D의 배열이, D-C-A로 확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순서가 E-B-F-G-D-C-A로 정확하게 주어진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임.

- ①의 경우, E사와의 계약이 B사와의 계약에 선행한다는 것은 A, C, D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순서를 확정짓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
- ②의 경우, B사와의 계약이 G사와의 계약에 선행한다는 것은 A, C, D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순서를 확정짓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
- ③의 경우, C사와의 계약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는, A, C, D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단서에 의해서는 A, C, D의 순서가 C-D-A인지 D-C-A인지 결정할 수 없다.
- ⑤의 경우, F사와의 계약이 D사와의 계약과 인접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A, C, D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순서를 확정짓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

<예제 26> 어떤 살인 사건이 2003년 12월 23일 밤 11시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한 명이며, 현장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인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범인 외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용의자 A, B, C, D, E가 있다. 아래에는 이들의 진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다섯 사람 중에 오직 두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범인이라면, 누가 살인범인가?

- A : 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11시에 서울역에 있었다.
- B : 그날 밤 11시에 나는 A, C와 함께 있었다.
- C : B는 그날 밤 11시에 A와 춘천에 있었다.
- D : B의 진술은 참이다.
- E : C는 그날 밤 11시에 나와 단동이 함께 있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정답 및 해설 : ⑤

먼저 B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만약 B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D의 말도 거짓말이 된다. 오직 두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A, C, E의 말은 참말이어야 한다. 하지만 C와 A의 말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따라서 B의 말이 참말이어야 한다. B의 말이 참말이므로, D의 말 역시 참말이며, 따라서 A, B, C는 함께 있었다. 따라서 E의 말은 거짓말이다. 오직 두 명만이 거짓말을 했으므로 A, C 중의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A, C의 말 중 하나는 참말이며, A, B, C는 함께 춘천 또는 서울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같이 있었다. 살인사건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발생했으므로, A와 C는 모두 범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 중의 한 명이 범인이므로, E가 살인범이다.